

# 지방자치

# 30년,

# 시민이

# 만들고

# 지켜온

# 민주주의

- ① 시민이 만들어온 지방자치의 기록
- ② 시민참여의 씨앗을 뿌리다
- ③ 함께 외친 목소리, 우리의 연대

「지방자치 30년,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책자 디자인은 풀뿌리 민주주의 30년의 시간을 ‘자라온 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나무로 보았을 때 시민의 참여는 씨앗이자 뿌리이며, 30년 동안 축적된 시간과 행동들은 오늘의 사회를 지탱하는 줄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픽은 나이테, 시간의 축적, 울림, 스며듦, 픽셀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픽셀로 구성된 나이테의 형태는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간 흔적이 아닌, 서로 다른 성장점이 겹쳐 만들어진 다층 구조입니다. 이때 픽셀은 나이테의 결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구축하는 시각적 단위로, 시민들의 참여가 모여 형성된 민주주의의 결을 상징합니다.

표지 디자인은 민주주의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자라온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해, 앞면은 검정색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지금’을 강조하고, 뒷면은 동일한 색조의 그래픽으로 시간이 쌓이며 스며든 ‘기록의 층’을 연결했습니다.

내지 디자인은 이 개념을 확장해,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책 전체의 리듬으로 이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픽셀은 시민들의 활동과 시간이 쌓인 순간들을 담은 민주주의의 작은 조각을 의미하며, 각 순간의 축적이 모여 하나의 결을 이룹니다.

## 지방자치 30년,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 김선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일궈나가야 합니다.

우선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이 망쳐 놓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다행히 이재명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전이 서울과 그리 멀지않고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발전하여 왔지만 지역적 특성이 부족합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전의 지역적 매력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대전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 원도심이 점차 사라져 둔산과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보존

되어야 도시의 품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내년에 지방선거에 지역의 주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결집하여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당선시켜 우리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실질적인 민주화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이러한 시민운동과 자신들의 생활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왜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운동이 시민들 속으로 확산,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다양하게 분화된 시민들의 삶의 조건과 현실, 요구와 감각에 대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탐구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의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 죽사

#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심과 인권-나무 공동대표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미쳐 돌아가네 재벌들만의 세상  
무능한 정치인들의 세상  
철밥통 관료들의 세상

미쳐 돌아가네 위선자들의 세상  
무늬만 진보주의자들의 세상  
찌질한 먹물들의 세상

최근에 발매된 안치환 14집에 실려있는 ‘인간계(人間界)’의 가사입니다. 12.3 내란에 맞서 우리가 다짐한 다시 만날 세상은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양당세력의 자리 보존을 위한 정정도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지만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18년째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입진보도 아니었습니다.

지방권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 행정을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 지방자치라는 의미이지만 실제 주민은 보이지 않고 독단·독선의 시장 자치가 활개를 치는 것이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입니다. 시장의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시의회 역시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당리당략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토박이 있지만 실제 권력은

국민이 아닌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나오는 너무나 허약한 민주주의입니다. 무늬만 민주주의를 벗어나 주권자 국민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국회 권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온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길을 30년 동안 걸어온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멈추기 위해, 위선자들의 거짓을 밝혀내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지방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난 30년간 행동으로 기록해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좀 더 연대하고 힘을 보태지 못한 용기 없음과 게으름을 반성합니다. 다가오는 30년은 사람과 비인간 자연들이 공존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힘차게 만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죽사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주년에 부쳐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 자양분이 되고 토대가 되었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 시민단체란 단어도, 지방자치라는 단어도 낯설게 다가왔던 시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더 따뜻한 사회,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섰던 1995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기억하게 됩니다.

서대전시민공원 옆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시작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옆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나란히 있어서 협력과 연대로 대전 지역사회 변화를 모색하고자 노력했던 당시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두 단체의 회원으로도 참여했던 지난 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사업, 부패 정치인 낙천, 낙선을 통한 정치 개혁운동, 도박도시는 안 된다는 장외 경마장 유치 반대운동,

월평공원 관통도로 및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운동과 함께 조사 사업을 통한 개선 활동, 법 제정 운동, 지역 현안 사업 대책위 활동 등 30년의 기록 속에 알알이 박힌 사업과 활동들이 민주적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한발 한발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불의에 맞서고, 지역공동체의 희망을 위해 모든 순간 함께 했던 활동가들과 시간과 마음을 내어 든든한 단체로 성장을 이끌었던 후원회님들 또한 응원과 격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이 있어 가능했던 30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0년, 기후위기시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제들의 중심에 참여와 연대의 힘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공동체를 향한 여정에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 30년을 평가하고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의 30년을 회고하는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입니다. 419혁명 이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좌절되었고, 1987년 6월항쟁으로 탄생한 1987년헌법에서 비로소 지방 자치가 법제화 되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치로 내세운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가 발족을 하게 되었으니, 지방자치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같은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의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지방권력이 더 이상 중앙권력의 하부기관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권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문제보다 전국적 이슈에 민감하게 지방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무관심한 영역에서는 권력이 자기논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왔음도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존재 의의와 가치가 발휘되어져 왔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각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더 이상 권력바라기가 되지 말고 지역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였고, 자칫 무관심으로 묻혀 버릴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되돌아 보고 각성할 것을 소리쳐 왔습니다. 가끔은 메아리 없는 공허함으로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전시민 누구라도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일군 아주 소중한 성과입니다. 활동가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습니다. 권력감시의 날카로운 눈빛은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자칫 무관심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현황을 쉽없이 알려야 하며,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전을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틀과 통로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본 자료집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버리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창립 30주년 기획]

시민이 만들어온

지방자치의 기록

# 지방자치 30년 라운홀미링: 대전 시민이 말하는 다음 30년의 과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 1. '참여 - 속의 - 갈등 - 신뢰'의 간극을 시민의 언어로 측정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축적된 제도의 성과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민주주의의 질을 묻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민사회 연구소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했다. 재정적 한계로 시민사회 자체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시민인식을 직접 조사한 의미가 크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30년이 흐르는 동안, 대전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의회·행정예목소리를 내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결정 구조, 주민참여예산 축소, 일방적 행정 등으로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연구는 30년 지방자치의 역사·시민 역할·현재 한계·미래 과제를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이 만들어온 자치 경험을 자긍심으로 재조명하고, 동시에 오늘날 드러난 문제들을 데이터와 생생한 증언으로 정리하여 지속 가능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615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설문을 진행하고, 대전지역의 민주주의 관련 단체들과 협업해서 공론장을 설계했다. 시민 설문은 2025년 5월 2~9월 28일까지, 성, 연령, 지역 비례할당 추출로 진행했다. 설문 결과 '제도는 안정되었으나 체감의 간극이 크다'는 가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 2. 설문 분석 요약 - 관심은 높으나 참여는 부족, 내 삶의 변화가 미흡하다

### 2-1. 응답자 일반 현황

대전 거주 30년 이상이 절반을 넘고, 40·50·60대가 다수인 표본은 지역 정주성이 높고 생활정책에 민감한 시민의 시각을 잘 반영한다. 정치 성향이 고르게 분포해 특정 진영 편향을 줄였다는 점도 강점이다.

거주기간: 30년 이상 거주자가 51.5% → 대전 정주 기반이 매우 안정적임
거주지역: 서구(34.6%)와 유성구(25.2%) 비중이 높음
연령: 40대(23.4%), 50대(22.0%), 60대(21.5%) 중심
정치성향: 중도 39.8%, 진보 38.6%, 보수 21.6% → 균형적 분포

## 2-2. 지방자치 30년 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 신뢰는 있으나 '보통' 응답이 두꺼운 층을 이룬다. 이는 제도가 작동해도 개인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분권 강화·역할 확대에 대한 지지는 방향성을 확인해 주지만, 실감의 간극을 줄일 전달·피드백 장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p>종합평가: 긍정 42.6%, 보통 40.8%, 부정 16.4%. → 대전시민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 다만 '보통' 응답이 많아 체감 부족</p>
<p>시사</p>
<p>관심도: 관심 있음 47.0%, 보통 37.4%</p>
<p>만족도: 만족 34.3%, 보통 48.1%, 불만족 22.6% →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개인적 체감효과는 미흡</p>
<p>지방분권 강화 의견: 찬성 59.1%, 보통 31.2%, 반대 9.8%</p>
<p>지방정부 역할 강화 인식: 강화 45.3%, 변화 없음 41.1%, 약화 12.7%</p>

## 2-3. 분야별 성과평가 (10점 만점 평균)

생활환경·복지·문화는 평균 이상이지만 '지역경제·일자리'와 '주민자치·참여역량'이 낮다.

그간 물적 인프라 중심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수월했고, 경제성과 시민참여의 질적 심화가 뒤따라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생활환경·도시관리 6.21
교육·문화·여가 6.20
보건복지 6.11
주민자치·참여역량 5.78
지역경제·일자리 5.75
종합평균: 6.01점
→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경제·참여 분야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 2-4. 지방자치제 기여도 인식

민주주의 발전에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나, 지역균형·분권·개인 삶의 변화는 ‘보통’이 많다. 제도는 가치와 규범을 확산했지만, 생활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약하다는 신호다. 시민이 체감할 ‘효능 경로 보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발전 기여: 긍정 43.0% → 풀뿌리 민주주의 효과 인정
지역균형발전·분권 기여: 보통(45~50%) 응답 다수 → 제도 효과 한계 지적
개인 삶 기여: 긍정 29.4%, 보통 48.3% → 효능감 부족

## 2-5. 주민참여제도 인식

알고는 있으나 참여는 적고, 영향력 평가는 보통 수준이다. 참여의 문턱·시간 비용·성과의 가시성이 낮을 때 생기는 패턴이다. 이후 과제는 실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활성화 필요 제도로 주민감사제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감시·책임’ 강화 욕구를 시사한다. 의견 수렴 평가에서 자치구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실제 시민과의 접근성이 가까울 수록 의견수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도 가능하다.

인지도 높음: 주민자치회(81.9%), 주민참여예산제(77.7%)
참여경험 낮음: 모두 한 자릿수(6~12%)
정책영향력 인식: 주민자치회(5.79점), 주민참여예산제(5.73점)
활성화 필요 제도: 주민감사제(32.0%) 최우선
의견 수렴 평가: 자치구(2.83점)가 가장 높음, 광역 단위는 낮음

## 2-6. 시민사회와 공동체

NGO 신뢰가 행정·의회보다 높지만, 전체 신뢰 점수가 낮고, 갈등 유발 인식도 만만치 않다. 선거에서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청렴성과 비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동체 소속감이 약한 현실은 연결망 회복과 신뢰 플랫폼으로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과제다.

신뢰도: 시민사회(NGO 2.69점)가 시청(2.62), 시의회(2.55)보다 높음
시민사회 기여도: 긍정보다 갈등 유발 응답이 더 높음(31%)
공동체 소속감: 긍정 33.8%, 보통 41.0%, 부정 25.2%
정치 양극화 인식: 한국사회 71.2% 심각, 대전지역 56.9% 심각
주체 간 갈등: 단체장 vs 시민사회(6.14점), 단체장 vs 의회(6.08점) → 권한 집중에 따른 갈등 심각
선출직 평가 기준: 청렴성·도덕성(36.9%), 정책공약비전(34.8%)이 최우선

## 2-7. 상관분석 주요 결과

주민자치 참여 경험은 역량·경제성과와 맞물려 상승하고, 공동체 소속감은 생활환경·경제·교육 등 전반 평가와 유의하게 연결된다. 시민사회 신뢰 또한 경제성과·총평가에 영향을 준다. 요컨대 ‘참여 - 경제 - 신뢰’의 삼각 고리가 지방자치 성과의 동력이라는 뜻이다.

주민자치 참여 경험 ↔ 주민자치역량( $r=0.253$ ) / 지역경제 일자리와 강한 상관( $r=0.726$ )
공동체 소속감 ↔ 성과평가
생활환경·도시관리( $r=0.468$ , $p<0.01$ )와 가장 높은 상관
이어서 지역경제·일자리( $r=0.387$ ), 교육·문화·여가( $r=0.445$ ), 보건복지( $r=0.445$ ), 주민자치참여역량( $r=0.447$ ), 지방자치 30년 평가( $r=0.424$ )와도 유의한 상관 → 공동체 소속감이 강할수록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 기반 강화에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공동체 소속감 ↔ 제도 참여 경험
주민자치제도 참여 경험과도 유의한 상관( $r=0.342$ , $p<0.01$ ) →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시민일수록 제도 참여 경험도 많아, 제도와 공동체 인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
시민사회 신뢰 ↔ 지역경제 일자리( $r=0.392$ ), 지방자치 30년 총평가( $r=0.387$ )
시민사회 신뢰 ↔ 주민자치 참여 경험( $r=0.225$ ) → 경제성과·주민자치 역량·시민사회 신뢰가 지방자치 성과의 3대 핵심축

## 2-8. 종합적 시사점

<p>■ 체감형 지방자치 강화 필요</p>
<p>관심과 긍정적 평가는 있으나 개인 삶의 효능감은 낮음 →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p>
<p>■ 경제성과 주민참여 연계</p>
<p>주민참여역량이 지역경제 성과와 밀접히 연결됨 → “참여-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이 핵심</p>
<p>■ 시민사회 신뢰 기반 회복</p>
<p>시민사회 신뢰가 경제성과와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침 → 행정·의회와 시민사회의 협치 구조 제도화 필요</p>
<p>■ 정치양극화 완화와 합의 문화 정착</p>
<p>대전은 전국 대비 양극화 인식이 낮음 → 중도 성향 다수와 개방적 태도 (정치적 입장 수용도 43.9%)를 기반으로 “지역통합 모델” 구축 가능</p>
<p>■ 지방정부-의회-시민사회 갈등 조정 장치 마련</p>
<p>단체장 권한 집중으로 갈등이 심각 →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 및 제도적 협치기구 필요</p>
<p>■ 공동체 기반 재구성</p>
<p>주민들은 주거단지·동 단위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온라인 공동체 영향도 확대됨 → 지방자치는 생활 단위 공동체와 디지털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p>
<p>공동체 소속감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지방자치 성과평가와 직접 연결됨</p>
<p>특히 생활환경과 경제적 조건이 공동체 유대의 기반이 되며, 이는 다시 주민참여 활성화로 이어짐</p>
<p>따라서 지방자치는 “생활환경 개선 + 경제적 뒷받침 + 공동체 기반 참여 확산”이라는 3중 구조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함</p>

### 시민설문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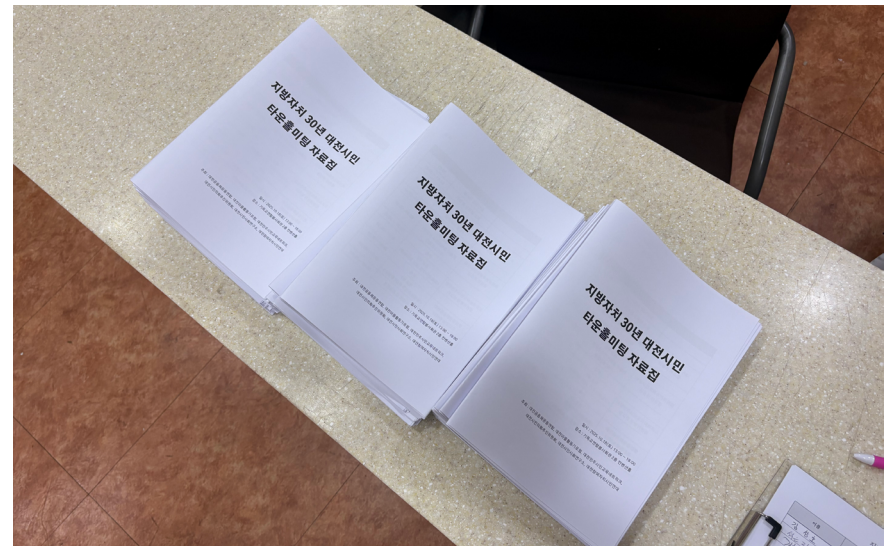
### 지방자치제도 30주년 평가 자세히 보러가기



## 3. 타운홀미팅 <시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서 확인된 네 가지 쟁점



25.10.18. 지방자치 30년, 대전 시민 타운홀미팅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25.10.18. 지방자치 30년, 대전 시민 타운홀미팅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자료집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설문 결과를 정리하고, 지역 시민단체, 공동체 운동 관계자들의 의견을 보충하기 위해 10월 18일, ‘대전시민 타운홀미팅 - 시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진행했다. 행사는 대전공동체운동연합·대전마을활동가포럼·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전시민의회추진위원회·대전시민사회연구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은 네 개 의제로 묶였다.

- ① 참여의 역설을 넘어 속의와 신뢰의 민주주의로,
- ② 우리는 시민의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③ 풀뿌리의 기초, 민주시민교육,
- ④ 공동체 3법과 주민주권운동.



25.10.18. 타운홀미팅 중 첫번째 발제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25.10.18. 타운홀미팅 중, 각 세션별 발표자

첫째 의제에서는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의 발표로 지방자치 30년을 시민의 언어로 재점검 하며 ‘참여의 역설’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대전 시민 6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토대로, 전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만족과 체감 변화는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제·일자리, 주민 참여·자치역량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아, 제도는 안정됐으나 생활 속 효능감은 약하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흥미로운 대목은 참여·관심이 높을수록 지역의 갈등과 양극화를 더 선명하게 ‘인지’한다는 상관관계 분석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라기보다 시민 각성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갈등을 학습과 조정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속의 시스템이 관건임을 시사한다. 또 외부 권력과 대립보다 시민사회 내부 갈등이 NGO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확인되며, 내부 거버넌스 정비와 투명성 강화가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발표는 민주시민교육 확장, 상설 공론장 운영, 정당·의회·행정·시민사회가 엮이는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안하며, “민주주의는 갈등을 먹고 자란다”는 메시지로 결론을 맺었다.



25.10.18. 타운홀미팅 중, 발제를 들고 각 테이블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참여의 형식화’와 ‘공론장 축소’가 반복 지적됐다.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은 단체 간·세대 간·시민 - 행정 간에 뒤엉켜 진단과 처방을 어렵게 만들었고, 공론장을 지탱하던 제도적 기반의 후퇴가 속의 역량 저하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동시에 ‘갈등 =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학습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됐다. 상설 공론장 복원, 갈등조정 역량 강화, 세대 간 공통언어 설계, 투명성과 대중성의 동시 강화 등 실행제안이 이어졌다.



25.10.18. 타운홀미팅 중, 테이블별 토론하는 모습

## 4. 지방자치 30년 시민공론장 FGI 종합보고서 -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묻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 제도의 확립을 넘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참여’와 ‘숙의’, ‘갈등’과 ‘신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자치의 30년을 성찰하고, 향후 지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여섯 개 그룹(시민활동가, 사회적경제 종사자, 연구자, 언론인, 청년, 정치인 등)의 토론 내용을 주제별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① 참여의 역설을 넘어 숙의와 신뢰의 민주주의로 ② 시민의회 제도화의 방향 ③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민주시민교육 ④ 공동체 3법과 주민주권운동의 네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4-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자치 30년을 기점으로 ① 지역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민주주의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② 시민 참여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며, ③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데 있다.

#### 2) 조사 방법

##### (1) 조사 방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2) 조사 대상

6개 그룹, 총 40여 명

### 4-2. 조사 결과

#### 1부 | 참여의 역설을 넘어, 숙의와 신뢰의 민주주의로

##### 1) 문제 진단 : ‘참여’의 형식화와 공론장 축소

참여자들은 ‘시민사회 내부 갈등’의 의미가 불명확해 토론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한다. 이는 갈등의 층위(단체 간·세대 간·시민-행정 간)가 뒤엉킨 채 논의돼 왔음을 시사한다. 지역에서 공론장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진단이 다수였다. 특히 “시민참여 조례 3개가 사라지면서 시민의 의견을 나눌 자리가 줄었다”는 언급은 제도적 기반의 후퇴가 숙의 역량의 약화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 2) 갈등의 재정의

역제 대상에서 학습 자산으로 갈등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며, 대화·타협을 매개한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됐다. 공통 언어의 붕괴(세대·이념 간 단절)는 갈등 관리 실패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민 개개인이 습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갈등의 구조적 완화가 가능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주민자치·공동체의 역할).

#### 3)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전환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전문·폐쇄적 집단’으로 인식하며 거리감을 호소한다. 이 인식은 “너희끼리만의 세계/세금 나눠먹기” 프레임으로 확장되어 신뢰를 잠식한다(다수 그룹 공통 진술). 따라서 시민단체는 비판 주체 → 신뢰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규정해야 한다. 즉, 의제 투쟁 중심에서 일상 의제·생활 언어로, 일방형 홍보에서 콘텐츠형소통(짧고 흥미로운 형식)으로 전환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여러 조에서 솜뭉치·유튜브 제안). 근거 논지는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 태도·자존감 함양의 필요로도 연결된다.

#### 4) 제1부 세부 실행 과제

##### (1) 상설 공론장 복원

주제-대상 맞춤형 소규모 ‘의견살롱’과 분기별 ‘시민라운드테이블’ 설치(위원회가 아닌 상시 커뮤니티 모델).

##### (2) 갈등조정 역량강화

활동가·주민 대상 ‘갈등 코칭’ 워크숍(경청·재진술·핵심이해 도구) 정례화.

##### (3) 공통 언어 설계

20·30대-50·60대가 함께 쓰는 핵심 키워드(예: ‘생활비·돌봄·안전·기회’)로 정책 메시지 사전을 공동 제작.

##### (4) 투명성·대중성 동시 강화

회비·후원 흐름, 협상·재협상 결과를 스토리보드형 공개 리포트로 정례 발간.

#### 2부 | 우리는 시민의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1) 필요성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장치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는 시민이 의제를 발굴·토론·권고하는 상설 숙의기구로, 지방의회의 공백을 메우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름·위상·권한(법적 결정력) 등 개념적 난점이 거론됐다(다수 진술). 참여자들은 시민 참여의 체감효과(내 삶의 변화)를 설계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구조적 위험 : 대표성 편중·정치적 편향·형식화

### (1) 대표성 편중

시간·경제 여력이 있는 특정층이 과대표되는 ‘참여 엘리트화’ 우려가 제기됐다. 생계 보조 도입 시 악용 위험·정당성 훼손 가능성도 지적됐다.

### (2) 절차 설계 쟁점

추첨제는 공정하지만 역량 편차 보완책이 필요, 추천제는 추천권력의 사유화 위험이 존재. ‘참여 가능성’ 보장 장치(돌봄·교통·시간 유연성)가 병행돼야 한다.

### (3) 정치적 오용 방지

시민의회가 정치 입문의 ‘데뷔 무대’로 악용될 경우 제도 신뢰가 손상될 수 있어, 이 해충돌·선거활동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3) 설계 원칙: 대표성·숙의성·정책연결성

### (1) 대표성

인구통계 가중추첨(성·연령·지역·소득), 배제지표 최소화(돌봄·근무형태 고려), 이해당사자·전문가 ‘한지 좌석’ 제한

### (2) 숙의성

사전학습 키트·중립 퍼실리테이션·소수의견 보호 규칙·합의형/다수결 혼합 규칙

### (3) 정책연결성

결과물의 의무적 수리·답변제(지자체는 60일 내 회신/이행계획)

### (4) 정보공개

질의응답록·근거자료·소수의견 보고서 동시 공개(신뢰·학습자산 축적)

## 4) 데이터 기반 참여 설계

‘시소·주민참여제 참여자 특성’(경로·소득·시간대) 사전 파악으로 대표성 편향을 교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 5) 2부 세부 실행 과제

### (1) 조례 초안

시민추첨·참여보조(교통비·돌봄), 이해충돌·선거활동 제한, 행정부처 답변의무 조항 포함

### (2) 시범 의제 2건

(예) 예산 정보접근 개선, 생활안전(야간조도·보행).

3개월 단위로 학습 - 숙의 - 권고 - 회신 사이클 운영

### (3) 교육 연계

교내 ‘의회 모의숙의’ - 지역 시민의회 실습의 듀얼 트랙 설계.

### (4) 성과 지표

대표성 지수, 숙의 품질(발언 다양도·상호인용률), 정책수용도, 시민 신뢰도

## 3부 | 풀뿌리의 기초, 민주시민교육

### 1) 법제화의 당위와 현장의 결핍

여러 집단이 민주시민교육 법제화의 필요를 명시했다. 현재는 민간 네트워크가 월 2회 수준의 교육을 회비로 유지하고 있으나 수요·지속성·접근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정권 교체 시 중단되는 취약성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단발성 강의가 아닌 학습·체험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환경·돌봄 등 생활 의제의 반복 경험이 가치 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 2) 교육 철학과 내용 원칙

#### (1) 정파 중립·가치 중심

‘주권자 의식, 타자 존중, 사실 검증, 혐오 억제’ 등 민주주의 핵심 역량에 집중(토론타도·자존감 교육 포함)

#### (2) 현장성·지역성

지역 갈등·역사 현장을 교과화(예: 보문산 개발 갈등 토론, 지역 민주주의 장소 답사)로 경험적 학습을 강화

#### (3) 생애 맞춤

아동·청소년(모의의회·게임화), 청년(팩트체크·미디어 리터러시), 장년(갈등조정·노동권), 노년(디지털 혐오대응·시민정보 접근)

### 3) 제도 설계: 공·사 협력형 ‘학습 인프라’

#### (1) 기본법-지방조례의 2단 설계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인증제를 통해 다양한 교육주체를 제도권에 포섭.

#### (2) 민주시민교육센터(지역거점) 설치

커리큘럼 개발, 강사 인증, 학교-지역 연계, 자료 아카이브.

#### (3) 평가·환류

학습 전후 인식 변화, 참여 지속성, 지역 갈등사례 적용률 등 성과지표 운영

### 4) 3부 세부 실행 과제

#### (1) 핵심 역량 프레임(경청·근거 제시·반론 구성·합의/불합의 기술) 표준화.

#### (2) 4회기 이상 연속학습 기본원칙 도입(주의집중·내재화 기준).

#### (3) 학교-지역 코스로 교내 2회기 + 지역 공론장 2회기 연계 실습.

#### (4) 교사·활동가·청년강사 3축 강사은행 운영(공공 - 민간 공동 인증).

## 4부 | 공동체 3법과 주민주권운동

### 1) 문제 구조: 보조금 의존과 활동가 생계의 불안

활동가의 이동비·생활비 등 기초 비용 보전 체계가 취약하며, 자발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공공영역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 2) 지역경제 순환모델 제안(사례·아이디어)

#### (1)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결합한 ‘활동가 고용형’ 비즈니스 모델

공모사업의 일정 비율을 활동비로 활용하고, 돌봄·에너지·업사이클링 등 공공성 높은 분야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 (2) 주민참여예산-사회적경제 연계

마을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자치가 결정,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여 이익을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

#### (3) 에너지 자립형 모델(태양광 조합·주민배당 등)

지속가능한 공공 수익원으로 검토할 가치가 높다(복수 그룹의 제안·사례 언급).

### 3) 활동가의 제도정치 진출과 연대

거대 양당 구조에서 무소속·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연대 기반의 진입 전략(무소속 네트워크·정책연합)이 제시됐다(각 조 공통 논의)정치 진출은 개인 경력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적 수단이어야 하며, 시민단체는 질문·연대·콘텐츠 생산을 통해 정당정치의 단조로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4) 4부 세부 실행 과제

#### (1) 공동체 3법 통합 운영계획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목표·지표 단일화(참여율·고용·재투자율)

#### (2) 활동가 고용 보조금의 정착

공모사업·주민자치회 예산에 사무국 인건비 표준 반영(성과연동 인센티브)

#### (3) 마을형 수익 모델 3종 시범

태양광 조합, 돌봄·교육 결합형 마을기업, 업사이클링-온라인 판로형 사회적기업.

#### (4) 모금·회비 전문성 내재화

기부 세액공제 캠페인, 회원 관리·스토리펀딩 전담 인력 양성.

#### (5) 정치 연계 거버넌스

시민의회 - 의회(시·구) - 집행부 간 정책 전달·답변 의무화

+ 시민단체 정책브리핑 데이 분기 운영

## 4-3. 결론 및 시사점

### 1) 종합 결론: ‘참여의 역설’을 넘어 ‘생활의 민주주의’로

30년의 지방자치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안정시켰지만, 참여의 양적 확대가 질적 심화를 보장하지는 못했다. 형식적 참여와 행정 의존, 시민사회의 관성화, 그리고 공론장의 축소는 지방자치의 ‘참여의 역설’을 드러낸다. FGI 결과,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는 ‘숙의와 신뢰의 일상화’이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참여에서 숙의로의 전환이다. 의견 제시의 절차를 넘어, 갈등을 공적으로 조정하고 합의하는 ‘숙의의 기술’을 지역 단위에서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단체에서 시민으로의 전환이다. 시민단체 중심의 운동을 넘어, 개인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셋째, 보조금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이다. 활동가의 생계 안정과 공동체 경제의 순환 구조를 통해, ‘민주주의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2) 시사점

### (1) 속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시민의회 제도는 단순한 토론장이 아니라, 공론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시민추천제·대표성 가중제·공개 답변 의무 등 실질적 절차를 갖춘다면,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의회 운영 과정에서 청년층·취약계층을 보조 인력으로 참여시켜 속의의 학습과 고용을 연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제도적 실험과 더불어, ‘공론장 운영자(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속의 역량이 행정의 관료적 언어를 넘어설 때 진정한 주민주권이 가능하다.

### (2) 민주시민교육의 생활화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 선택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단순 지식전달이 아닌 체험형·프로젝트형 학습이 되어야 한다. 공교육 안에서의 주입식 학습을 넘어, 시민단체와 연계한 워크숍형 교육이 제시되었고, “민주시민교육의 효용이 체감되어야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극단화·혐오·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사회적 면역체계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 (3) 주민주권과 공동체

경제의 통합주민주권운동은 ‘보조금의존적 운동’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정치적 주권의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성미산마을공동체처럼 생활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모델, △신안군의 태양광 배당형 모델,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활동가의 안정적 생계 보장을 위해 지역재단 설립과 ‘활동가 인건비 정례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순환형 주민경제 모델이 주민주권의 물적 토대가 될 것이다.

### (4)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

시민단체는 행정보조의 하청 구조를 탈피하여, 시민의 문제를 연결·매개하는 신뢰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 조직운영과 전문가 중심 구조를 벗어나, ‘참여 친화적 콘텐츠 생산’과 ‘세대 간 언어 통합’이 필수 과제로 제시되었다. 행정은 ‘간섭 없는 지원’, 시민사회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상호신뢰의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

## 3) 제언

FGI를 통해 드러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말이 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표현처럼, 지방자치의 완성은 제도보다 문화에 있다. 민주주의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시민의 신뢰를, 갈등의 해소보다 속의의 과정을 중시할 때 비로소 성숙한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공론의 재구성과 신뢰의 복원이라는 문화적 과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 길의 출발점은 ‘시민 한 사람의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이며, 그 축적이야말로 다음 30년 지방자치를 지탱할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편집 김재섭

#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향한 30년 궤적: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 활동평가 및 향후 과제

김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창립과 시대적 소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1995년 4월 28일 창립한 이래 걸어진 3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부활 및 성숙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가 절실했던 시대였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태동했다. 창립 초기부터 지역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종합적 권력 감시 운동체'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왔다.

지난 30년간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지향해 온 핵심 가치로는

첫째,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둘째, 끊임없는 집행부 및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지역 내부 민주주의를 공고히 했다.

특히,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와 과거사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평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관련 의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고 인권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넷째,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을 재정 기반으로 고집함으로써 자립재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지역 자본가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기반이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립성은 시민운동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 역량 강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체제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 또한 지역 내부 민주주의는 지체되어 있으며, 부정부패와 불신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원고는 대전 참여자치연대의 지난 30년간 활동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후위기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 주요활동 평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지난 30년간(1995~2024년) 수행한 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활동일지를 고찰한 결과, 총 21,616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활동 실적이 확인되었다. 이들 활동의 88.6%는 대전시 정책에 집중된 광역 활동이었으며, 45.5%가 타 단체와의 연대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활동 영역으로, '지방권력 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주민자치 및 풀뿌리민주주의 실현활동', '조직 내부 역량 강화 및 시민연대 강화' 등의 세 가지로 평가된다.

### 2-1. 지방권력 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지역 정치 지형 속에서 창립 초기부터 종합적 권력 감시 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을 지속하며,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하고 지역 내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방자치 투명성 확보와 대전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2-1-1. 권력 감시와 투명성 제고

대전참여자치연대의 30년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권력 감시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킨 것이다. 그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대전시와 5개 구청, 의회 등 총 19개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당시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던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지역 사회에 각인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운동은 시민참여형 권력감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후 전국적인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민주주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본격화했다. 우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 예산 집행 현황, 수익계약 추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나아가, 행정의 책임성을 묻고 예산 낭비를 견제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구 낭월동 도시재생센터의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를 촉구한 일과, 중구 사계절 스케이팅장 철거와 같이 무분별한 전시성 낭비 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여 지방 행정의 무책임한 운영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단순한 비판 단체를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 정부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입증했다.

## 2-1-2. 지방자치 개혁 및 정책 대안 제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단순한 문제 제기엔 머물지 않고, 실증적인 조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제도 개혁을 주도해 왔다.

첫째, 도시교통 개혁에 모범적인 활동을 펼쳤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에서 시작해 버스 준공영제 개선, BRT 도입 촉구 등을 지속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대전시의 교통정책을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수요관리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 도입을 이끌어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지상 고가 방식 대신 트램(노면 방식)으로 수정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실증적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견제하고 개혁했다. 특히 대전 경륜장 건설 반대 운동에서는 시민여론과 경제분석을 통해 최종 승리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정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되는 등 전국적인 의제를 형성했다.

셋째, 시민사회의 자율성 및 공익활동 기반을 지키는 감시자 역할도 수행했다. 대전시가 시민사회 관련 조례(NGO 지원센터 조례 등)를 일괄 폐지하려 하자, 이를 ‘시민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실책’으로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함으로써 시민 사회 활성화 기반을 수호했다.

## 2-1-3. 선거 감시 및 유권자 운동을 통한 정치 개혁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선거가 정치인의 치적 쌓기나 이익 집단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경계하며, 깨끗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첫째,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하며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섰다. 2000년 총선 시민 연대 활동으로 부패 수구 정치인 퇴출 운동을 전개했으며, 2004년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 무효’와 ‘부패 정치 심판’을 내걸고 수구 정치 세력의 교체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 운동의 사회적 신망과 발언력을 크게 높였다.

둘째, 정책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 공약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바른 후보 기준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 활동을 지속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대응, 해외 연수 실태 조사, 원 구성 파행 대책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감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도록 시민 참여를 통한 압력을 행사했다.

## 2-2.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활동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단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실천을 주도했다. 특히 마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 운동처럼

지역민 주도의 자발적 공동체 운동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의 무게 중심을 주민의 일상으로 옮기고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했다.

### 2-2-1. 주민 참여 확대 노력 및 공동체 운동

창립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된 마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 운동처럼, 작은 지역 단위의 주민 운동을 활성화하고 동네 공동체 만들기 운동에 주력하며, 지방 자치를 주민의 입장에서 발전시키고자 했다. 특히 창립 10주년 사업으로 시작된 마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 운동처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에 기반한 모범적 공동체 운동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는 시민 단체가 시민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 중심의 자발적 운동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무게 중심을 주민의 일상으로 옮기고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시민 권익 옹호 활동으로는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을 통해 시민의 사법적 구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2001년 아파트 부당 전기료 반환 소송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폭설 피해, 하수도 요금 소급 인상 저지, 서구청 청사 불법 임대 공익 소송 등 다양한 권익 옹호 활동을 펼치며 시민 참여의 폭을 확장했다.

### 2-2-2. 지역 현안 대응 및 연대 활동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연대했다. 특히 환경, 인권, 평화 의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활동을 펼쳤다. 대전 기후 정의 행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 환경 문제와 대전 인권 사무소 설치운동을 비롯, 이라크 파병 반대,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활동 등 인권 및 평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청년·청소년 문제에 대한 감시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청년 정책의 본질을 잊은 행정을 비판하는 한편, 허위·누락 제출 의혹이 제기된 청소년 기관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보였다. 해당 문제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위·수탁 취소를 요구하는 등, 청소년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투명한 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숙의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2-2-3. 공익 활동 증진 지원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에게 참여자치 시민상을 수여하는 등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민 교육 및 대안 제시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민법률학교, 예산학교, 민주주의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 운동을 벌였다.

### 2-3. 조직 내부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강화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외부 활동의 성과를 내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지속 가능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창립 이래 회원 회비 기반의 자립 재정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 ‘정부 지원금 0%’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켰다. 이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또한, 회원 소모임 및 온라인 총회를 정착시켜 조직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데 기여했다.

#### 2-3-1. 자주재정을 통한 독립적인 시민운동 원칙 고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시민운동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 이래 회원 회비 기반의 자립재정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활동 경비 전액을 회원의 회비, 후원 사업 등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마련”하는 자립재정의 대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0%”를 고수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했다. 이는 외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이자, 조직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정책역량 강화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자립재정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지속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회원 탈퇴 비율과 더불어 꾸준한 회원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재정 적자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안 모색이 여전히 절실한 과제로 남아있다.

#### II-3-2.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확대

회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늘푸른 축구단, 등산 모임, 주부모임, 지역모임 등 소모임 활동을 정착시키고, 온라인 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 민주주의의 신장’에 기여하는 등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소식지 및 온라인 소통을 위해 ‘참여와 자치’와 같은 월간 소식지 및 뉴스레터(띠모크라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활동 소식을 전달했다.

#### 2-3-3.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역 내 개별 단체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모든 시민 사회 운동과 연대’하는 것을 창립 선언문에서부터 명시했으며, 전체 활동의 45.5%를 연대 활동으로 수행했다. 2000년 총선 시민 연대 등 각종 연대 기구에서 간사 단체로 활동을 주도하며,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행정도시정상추진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및 충청권의 연대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및 민중 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한국 타이어 노동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대책 활동, 대한 통운 노동자 사망 사건 등 노동 및 민중 단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하며, 사회적 약자와 계층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을 병행했다.

###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 활동의 성과와 한계

#### 3-1. 숫자로 본 대전참여자치연대 30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30년(1995년~2024년) 역사는 2만 1천 건이 넘는 방대한 활동 기록에 담겨있다. 이 숫자는 대전참여자치연대가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의제와 정책에 끊임없이 개입해 온 종합 시민 운동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총 활동 중 ‘연대 활동’은 9,826건(45.5%)으로, ‘자체 활동’(54.5%)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대전참여시민연대가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 노동조합, 전문가 그룹 등과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지역 사회의 힘을 결집하고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활동방식을 취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총 활동 건수 21,616건 (100%)	자체활동 11,970건 (54.5%)
	연대활동 9,826건 (45.50%)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역(대전광역시 정책/이슈) 활동’이 88.6%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총 21,616건의 활동 중 19,158건이 대전시 정책과 이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전이라는 지역 사회의 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적 이슈’(7.6%, 1,651건)나 ‘기초자치단체 이슈’(3.4%, 745건) 대응도 꾸준히 이어졌으나, 대부분의 활동은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되었다.

지역별 활동현황 21,616건(100%)	광역의제(대전광역시 이슈) / 19,158건(88.6%)
	정부의제(대한민국 전체이슈) / 1,651건(7.6%)
	기초의제(5개자치구 등) / 745건(3.4%)
	국제이슈(일본 등 국외) / 62건(0.3%)

대전참여자치연대가 가장 많은 활동을 펼친 분야로는 ‘지방행정·제도감시’와 ‘정치개혁’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행정·제도감시’분야 개선활동이 5,281건(23.1%)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개혁’ 분야가 3,420건(1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판공비 공개 운동,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촉구, 지방의회 모니터링 등 지방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제도 개혁을 이루려는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분야별 활동현황 (상위 6건)	지방행정·제도 감시 / 5,281건
	정치개혁 / 3,420건
	보건·복지 / 1,444건
	환경·에너지 / 1,086건
	국제이슈(일본 등 국외) / 62건(0.3%)

활동 방식 분석에서는 ‘회의(11,282건, 48.2%)’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전참여자치연대가 기자회견이나 캠페인과 같은 직접 행동뿐 아니라, 정책 토론, 전문가 협의, 공청회 참여 등 숙의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캠페인/집회’가 2,453건(10.5%)으로 주요 행동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제도적 참여와 대중적 여론 조성 활동을 균형 있게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

활동방식별 현황 (상위 5건)	회의 / 11,282건
	집회·캠페인 / 2,453건
	방송출연 및 언론 인터뷰 / 1,659건
	회원사업 / 1,539건
	보도자료·논평 / 1,528건

결론적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의 30년 활동은 압도적인 지역 밀착도를 바탕으로 제도 개혁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했으며,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연대를 통해 시민 사회의 의제를 지역 정책에 관철시켜 온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 3-2. 주요활동 성과 및 기여

대전참여자치연대의 30년 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시민주도형 권력감시 모델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먼저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 투명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지방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화하여 대전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98년부터 업무추진비(판공비) 공개 운동을 주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업무추진비 일체를 공개하도록 이끌어 냈다. 이 활동은 ‘판공비의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고,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와 재정 민주주의 확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시민의 힘으로 정책변경을 견인하기도 했다. 1996년 둔산 문예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반대 운동을 통해 대전시의 부지 결정을 결국 현재의 노은 지구로 변경시켰다. 이는 시민의 힘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을 변화시킨 첫 사례로, 여론 주도형 시민 운동의 가능성과 효력을 입증했다.

지방의회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도록 시민 참여를 통한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의원들의 해외 연수 실태 조사, 과도한 의정비 인상 비판, 대전시 의회 성추행 가해자 제명 촉구 활동 등을 통해 지방 의원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의정 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사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대중교통 개혁운동을 통해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 도입을 이끌어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지상 고가 방식 대신 노면 방식의 트램으로 수정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장애인주차장 설치 감시운동과 보행권 확보운동 등을 통해 대전시 교통 정책을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유의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행정수도/행정도시 건설 정상 추진 대책 활동을 통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으며,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고 MB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를 저지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주도하여 지역 정치 지형의 다원화를 이끌어냈으며, 정책 선거 문화 정착 노력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쓰며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시민운동의 독립성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대전 경륜장 건설 반대 운동(2001년~)을 펼쳐, 시민 여론 조사(69.6% 반대)와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통해 지역민의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담이 세수 증가분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경륜장 건설을 최종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월평동과 원도심의 마권 장외 발매소 폐쇄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 전국적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아파트 부당 전기료 반환 소송’, ‘고속도로 폭설피해 집단소송’ 등 공익 소송을 지원했으며, ‘대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한국전쟁 시기 대전산내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지역 사회 관심을 높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며, 대전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참여민주주의의 심화를 이끌어 온 종합적 권력 감시 운동 조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 주요분야별 활동 및 주요성과

활동 분야	주요 활동 내용	주요 성과 및 의의
지방자치 및 재정 민주주의	업무추진비(판공비) 공개 청구 및 운동 전개	대전광역시장의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업무추진비 일체를 공개 하여, '판공비 세부 내역 공개' 원칙을 정립하고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져옴.
	예산 감시 활동 선언 및 '예산 학교' 운영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을 견제 하는 핵심 역할 수행.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촉구 및 교육 분야 참여 예산 분석 추진. 예산감시 온라인 페이지 구축
	주민 감사 청구 및 공익 감사 요청 활동 (1998년~)	서구청 불법 행정에 대한 감사원 특별 감사 청구. 낭비성 사업(사계절 스케이트장 철거 등) 공익 감사 청구로 여론 환기. 공직자 채용 비리 감사에 시민 감사관으로 참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주민투표제도 개선, 주민소환제 입법 운동, 주민소송제 실효성 확보 노력 전개.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기 마련.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활성화 촉구 및 시민청구 토론회 요구
정치 개혁 및 의정 감시	총선시민연대 주도 낙천·낙선 운동 전개 (2000년)	지역 정치 지형의 다원화와 일부 개혁적 정치인의 진출을 이끌어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 (2010년~)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시민 참여를 통한 압력 행사. 지방의회의 기능 정상화에 긍정적 역할 수행.
	지방의회 감시 활동 (윤리, 예산, 부정부패 등)	의원 윤리 및 도덕성 기준 향상 요구. 관광성 해외 연수 문제 지적 및 재발 방지 촉구. 과도한 의정비 인상 견제.
도시 정책 및 교통 개혁	둔산 문예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반대 운동 (1996년)	시민 여론 및 논리적 대응으로 당초 부지 결정을 연기시키고, 현재의 노은 지구로 변경을 견인.
	대중교통 개혁운동 (1997년~)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 도입 및 정시성 확보 등의 운행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냄. BRT 도입 촉구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고가방식이 아닌 트램으로 수정 결정하는데 영향.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신행정수도/행정도시 건설 정상 추진 대책 활동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부각.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기반 형성. MB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 저지.
사행 산업 규제	대전 경륜장 건설 반대 운동 (2001년~)	시민 여론 및 실증적 경제 분석을 통해 경륜장 건설을 최종적으로 저지.
	마권 장외 발매소 저지 및 이전 촉구	원도심 마권장외발매소 저지 및 월평동 마권 장외 발매소 폐쇄 성과(2021년).
	사행산업 규제 시스템 마련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정부에 대한 압박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계기 마련 (2007년).
사회적 약자 및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 사무소 설치 운동	2014년 대전인권사무소 개설이라는 구체적인 성과 달성.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위원회 활동	대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2013년).
	한국전쟁 시기 대전 산내 학살 진상 규명 활동	관련 유족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꾸준히 활동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의 산내평화공원 조성을 이끌어냄.
교육 개혁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의 연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 및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연대하며,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활동 진행함.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기어	저소득층에게 불평등을 초래하는 관행을 비판하여,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는 데 유의미한 역할 수행.
	학교 급식의 공공성 확보 활동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 및 급식 지원 센터 설치를 요구함.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실태 조사	학부모 부담 전가 문제를 지적하여 대전 교육청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냄.

### 3-3. 직면했던 한계와 과제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대전참여자치연대는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시민운동 내부의 구조적 한계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과거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시대적 과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첫째, 주민 무관심 심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지체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후 시민운동의 도덕적 설득력이 약화되면서, 주민들의 공적 참여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낮은 참여 의식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전문화된 지방 권력 감시 및 견제의 효율성 확보 과제다.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는 더욱 전문화되고 견고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체장과 대의기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 시민 운동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지방 권력의 전문성과 이익 집단의 표출에 효과적으로 맞서 감시와 견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 선언적 방식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활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권력 비대화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등의 복합적인 환경에서, 과거의 선언적 ‘권력감시 운동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크다. 이를테면, 주요 정책 결정이 이미 밀실에서 진행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단순히 사후 감시를 넘어 정책 입안 초기 단계부터 과정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주도형 시민운동’으로 활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 4. 새로운 시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향후 과제와 비전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난 30년간 집행부와 지방의회 감시라는 뚜렷한 ‘권력형 감시운동’의 족적을 남기며 대전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나,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중대한 한계점 또한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활동내용이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소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회원 및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미흡했다. 이는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의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졌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40년을 향해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4. 새로운 시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향후 과제와 비전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난 30년간 집행부와 지방의회 감시라는 뚜렷한 ‘권력형 감시운동’의 족적을 남기며 대전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나,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중대한 한계점 또한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활동내용이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소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회원 및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미흡했다. 이는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의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졌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40년을 향해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4-1. 지방자치 심화와 풀뿌리 주권 강화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광역 정책 감시에는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줬으나, 특정 지역 및 현안에 집중되어 풀뿌리 지역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뼈아픈 자체 진단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활동의 무게 중심을 조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첫째, 마을 단위 자치 역량의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광역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민들의 공적인 참여 부진과 직결된 마을 단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회 등의 제도화를 통해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내실 있는 참여’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시민을 정책 생산자로 양성해야 한다. 총 활동 중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비중(18.6%)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예산 학교 등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정책 생산자로 양성해야 한다. 이는 마을 단위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원 방안 모색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 4-2. 데이터 기반 감시 혁신과 미래 의제 선도

제왕적 단체장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우려, 집행부 견제에 미약한 지방의회의 역할 부재와 전문성 부족, 그리고 주민 소통 및 공적 참여 부족은 지방자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더욱 전문화된 활동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시민운동은 이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감시 혁신을 통해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단순히 비판에 머물지 않고,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 정책 및 예산 감시, 이슈 모니터링, 그리고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한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무기로 한 전문성’은 권력감시운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나아가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단순히 현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미래 의제 선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 닥칠 기후 위기, 인구위기, 노동위기, 디지털 윤리 등 미래 사회의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미래 설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결국,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데이터 기반의 전문성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통해 지방자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 4-3. 지속가능한 조직 기반 구축 및 세대교체

지방자치 개혁을 비롯한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력 확보는 조직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부 혁신에 달려 있다. 특히 재정적·이념적 독립 기반 공고화와 미래 동력 창출을 위한 세대교체는 현 시점 시민운동이 직면한 핵심 과제다.

시민운동의 가치와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근간은 정치적 독립성 및 재정 자립이다. 시민운동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독립성을 사수하기 위해 회원 회비 100% 운영을 목표로 하는 특단의 재정 혁신 대안 모색과 실행이 시급하다.

오늘날 시민운동은 청년 회원 감소와 조직 고령화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면적인 세대 교체 노력은 필수적이다. MZ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긍정적 변화(Social Impact)를 창출하는 활동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20~30대 청년 세대를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시민운동의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과 지역 기반 연대가 요구된다. 젊고 활동적인 전문가 인력을 적극적으로 총원하고 분야별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운동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치 현안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풀뿌리 운동 조직 및 부문별 단체와의 실질적 연대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기반 운동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운동은 상기 세 가지 혁신 전략(재정적·정치적 독립성 공고화, 세대 교체 실행, 전문성 및 지역 연대 강화)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영향력과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5.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의 미래를 열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30년 역사는 조직 및 재정 민주주의 확보,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지방 권력 감시라는 굵직한 성과로 채워져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권력감시를 이끌어내고 도시·교통 개혁을 주도하는 등,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가두 집결형 운동이 아닌 여론 주도형 시민 운동’의 효력을 대전 시민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30년 활동 분석을 통해 ‘특정지역 및 영역 중심의 활동’과 ‘활동가 중심의 전문성’이라는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났다. 이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40년을 향해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의 질적 전환을 다짐해야 할 때이다.

물론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념과 지향은 분명히” 하고 “감시와 비판은 늘 날카롭게” 유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잃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지역민들과 지역 사회 공동체를 향한 따스한 애정”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양극화, 청년 세대 문제, 돌봄 문제 등 시민의 삶에 밀착된 대의적 시민운동을 강화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진보적 가치, 대중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 시민운동의 생명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에서 비롯된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그간의 한계로 지적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부진’을 극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으로의 질적 전환을 다짐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권력 중심의 ‘통치’가 아닌 ‘협치’와 ‘자치’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길에,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진보적 가치, 대중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대전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참여와 연대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전 지역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대전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대전’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 드린다.

# 부록)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30년사 활동분석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일러두기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사 활동분석>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활동은 각 연도 총회자료집에 수록된 활동일지를 대상으로 한다. 활동의 의미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이슈에 대한 대응,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와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 주민참여를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
3	대전참여자치연대의 활동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활동연도, 연대/자체 활동, 활동지역, 활동분야, 활동방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	활동지역은 국제, 국가, 광역, 기초로 구분하였다. 국제는 국외 이슈에 관한 연대활동으로 일본 구마모토 현민회의와의 연대, 미얀마 평화 공동행동 등이다. 국가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에 관한 활동으로 지방분권운동, 윤석열 퇴진행동 등이다. 광역은 대전광역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에 대한 활동으로 대전광역시 정책과 이슈, 국가 정책이지만 대전에 영향을 미치는 화상경마장, 과학벨트 등이다. 기초는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나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 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으로 유성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금산군 화상경마장 도입 저지 연대 활동 등이다.
5	활동분야는 경제, 문화, 공공시설, 행정제도, 복지/의료, 교통, 교육, 인권, 환경, 성평등, 정치, 노동, 주민참여, 내부회의로 구분한다. 활동에 따라 분야가 2개 이상의 분야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활동 건수와 분야별 활동 건수의 합계가 같지 않다.
6	활동방식은 논평, 인터뷰, 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집회, 정보공개, 고발/소송, 정책제안, 조사연구, 회원사업, 회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활동방식이 2개 이상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활동 건수와 방식별 건수의 합계가 같지 않다.

####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 활동 주요 현황 요약

##### 1-1. 연도별 활동건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1995년에서 2024년까지 활동건수는 21,616건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활동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건수가 비슷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 201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활동가 인원 감소에 따라 활동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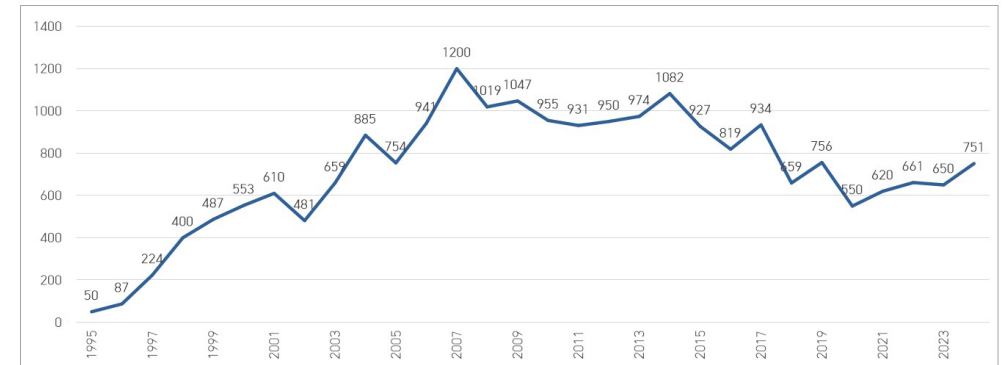


그림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도별 활동건수

##### 1-2. 연도별 활동지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1995년에서 2024년까지 활동지역은 광역, 기초, 국가, 국제로 구분함. 전체 활동 건수(21,616건) 중에서 대전시 정책, 이슈와 관련한 활동에 해당하는 광역 활동 건수는 19,518건(88.6%), 자치구나 인근 시군의 정책, 이슈와 관련한 활동에 해당하는 기초 활동건수는 745건(3.4%), 국가 전체의 정책, 이슈와 관련한 활동에 해당하는 국가 활동건수는 1,651건(7.6%), 국제적 이슈에 관련한 활동에 해당하는 국제 활동 건수는 62건(0.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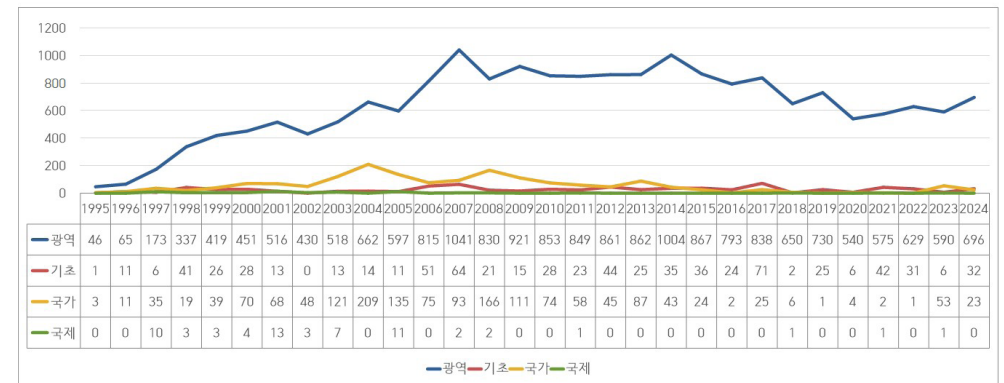


그림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도별 활동지역

### 1-3. 연도별 자체활동 여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1995년에서 2024년까지 활동 중 우리 단체만의 활동이나 단체 활동가가 외부 활동을 한 자체활동과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진행한 연대 활동으로 구분했을 때 전체 활동 중 자체활동은 11,970건(54.5%), 연대활동은 9,826건(45.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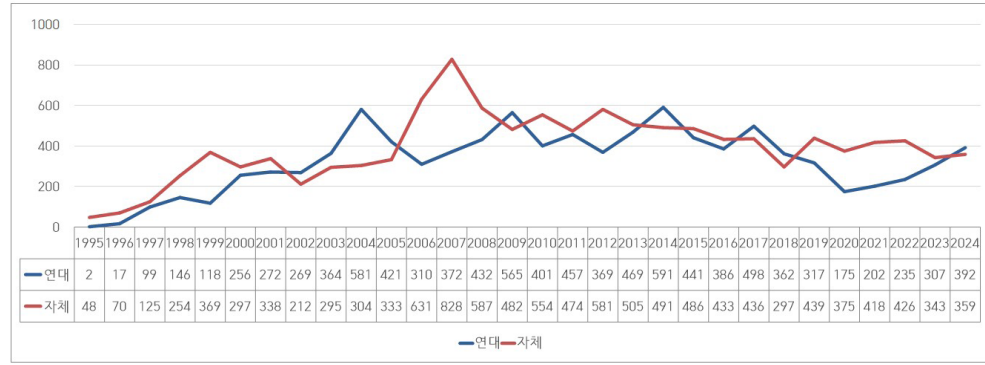


그림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도별 자체활동 여부

### 1-4. 활동분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1995년에서 2024년까지 활동 분야는 내부회의 6,051건(26.4%), 행정제도 5,281건(23.1%), 정치 3,420(14.9%), 복지/의료 1,444(6.3%), 환경 1,086(4.7%), 교통 1,069(4.7%)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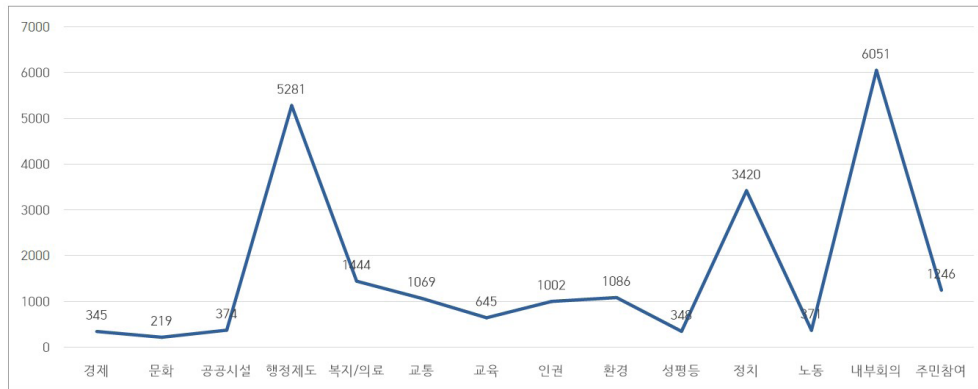


그림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995-2024년 활동분야

### 1-5. 활동방식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1995년에서 2024년까지 활동 방식은 회의 11,282건(48.2%), 캠페인/집회 2,453건(10.5%), 인터뷰 1,659(7.1%), 회원사업 1,539(6.6%), 논평 1,528(6.5%)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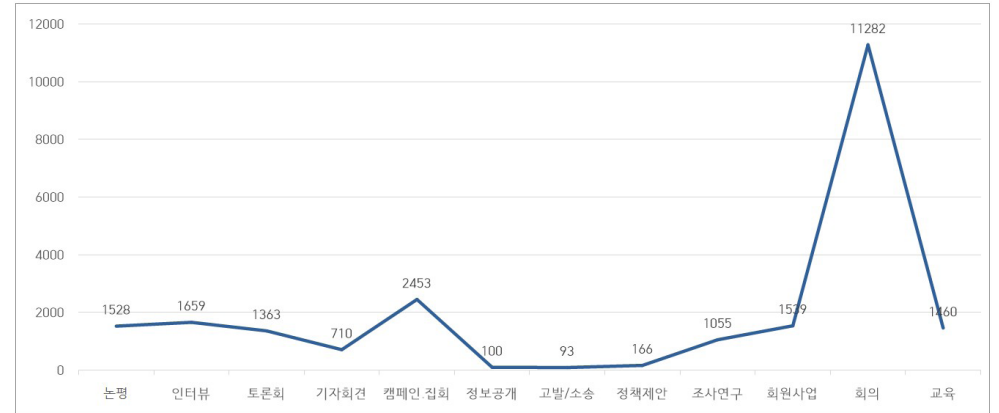


그림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995-2024년 활동방식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 활동 자세히 보기



# 시민의 눈, 이어지는 질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행정감시와 지금 시대의 행정감시 운동의 중요성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머리말 | 30년의 성과를 오늘의 언어로

2025년 9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10월까지도 정보공개 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감시의 도구인 ‘정보공개포털’이 먹통인 상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편, 메일, 전화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지난 30년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활동의 무게와 필요성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 1. 30년 된 단체의 30대 사무처장이 느끼는 무게

30년의 단체 역사와 거의 같은 나이를 가진 사무처장으로서, 저는 매일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하나는 신뢰의 무게입니다. 기존의 정보공개청구와 의정 모니터링, 긴 호흡의 소송과 현장 활동으로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에,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지역사회에서 귀를 엽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움의 책임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되, 더 읽히는 방식으로, 더 빨리,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 압박은 부담이면서도, 시대를 넘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이 진보하면서 행정은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절차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식은 충족되었지만 실질이 비어 있는 경우, ‘투명해 보이는 불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정감시 운동은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행간을 읽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유행 이라는데, 행정감시에서도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의 성과를 보존하는 일을 넘어, 행정감시 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도하고 있는 예산감시 페이지, 업무추진비 맛집지도와 같은 프로젝트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 2. 세상이 진보했지만, 감시가 느슨해질 때 부패는 어떻게 증가하는가

디지털 행정은 많은 장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입찰 공고와 계약 내역이 포털에서 손쉽게 열람되고, 문서의 표준 서식과 처리 기한이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보는 자동으로 신뢰를 낳지 않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지면, 부패는 더 조용하고 더 정교해집니다. 화면에 수천 건의 자료가 떠 있어도, 핵심 열이 빠져 있거나 기관마다 작성 규격이 제각각이면, 시민은 비교와 검증의 길을 잃습니다. ‘데이터의 홍수’가 곧 투명성은 아닙니다. 투명성은 비교 가능성과 추적 가능성, 그리고 설명 책임이 맞물릴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는 명확합니다. 첫째, 공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설명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지방정부 관계 공직자들은 여전히 “왜 공개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비공개어 언어는 더 공손해졌으나, 그 공손함이 때로 책임의 경계를 흐립니다. “관계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 저해 우려” 같은 관례적 표현이 이유가 아닌 ‘형식’으로 쓰이면, 내용은 비어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셋째, 이해상충을 스스로 점검하고 공개하는 관행이 아직 널리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시는 옛날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누가봐도 불법이거나 부패한 행동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사전·사후 설명이 제때 이루어졌는지, 비공개 사유는 구체적 근거를 충실히 제시했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9시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대서특필 되는 그런 질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작은 질문들을 꾸준히, 그리고 싱크가 맞게 던지는 일이 오늘의 행정 감시 운동의 부분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더 많은 시민이 따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운동을 고민합니다.

### 3.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행정감시 활동

#### 3-1. 2023년 수의계약 전수 점검 사업

최근 활동 가운데 가장 또렷하게 남은 일은 2023년 수의계약 전수 점검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3년의 계약 내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전체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을 대조하고 중복값을 제거한 결과, 총 56,937건 (공사 9,619건, 용역 15,841건, 물품 31,477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공사·용역·물품 전 영역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 발표 이후에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고도화 되었고, 의심사례에 대한 계약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조사는 기술적 한계를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엑셀로 시작한 작업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파일이 커질수록 컴퓨터가 멈추고, 저장 버튼 하나에도 화면이 멎었습니다. 한 셀을 고치면 다른 셀이 틀어졌고, 밤이 깊을수록 작업은 느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다루려면 컴퓨터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요. 저는 정규화와 인덱스, 조인 같은 낮은 개념을 익히기 시작했고,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배우며, '데이터 기반 감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구가 바뀌자 질문이 확장되었고, 질문이 확장되자 참여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23.07.24.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의심사례 발표 및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3-2. 정보공개 행정소송: 관례의 문을 여는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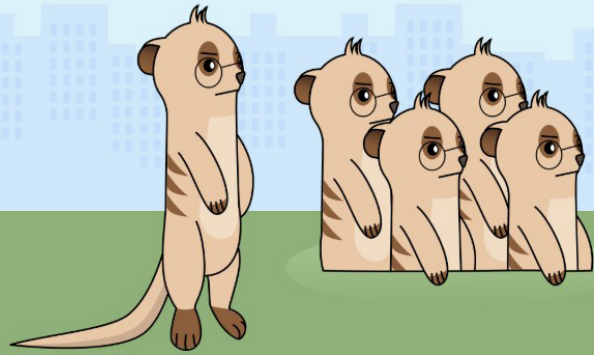
수년간 관례적으로 비공개되어 오던 대전시 위·수탁심사위원회 정보가 공개되도록 만든 과정 또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극우적인 세계관, 편향된 종교관으로 문제가 된 법인들이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영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결심했고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지역의 투명성에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사 위원회 정보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기준점이 마련되었고, 그 기준은 이후 유사 사안에 대한 공개 책임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승현 변호사님을 비롯해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단체 변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4누135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205363 판결
변론종결	2025. 4. 8.
판결선고	2025. 4.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5.04.29.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 일부 승소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감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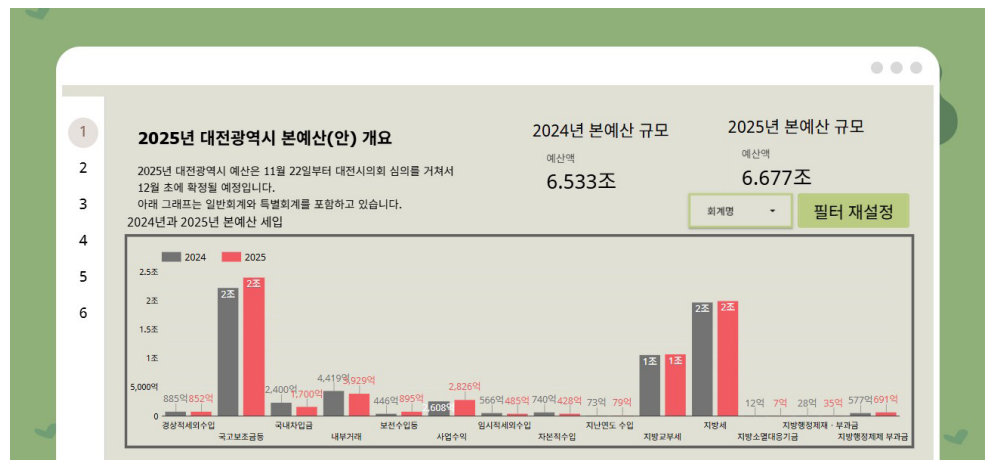


온라인 예산감시 플랫폼 '모니(MoNi)'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작)

### 3-3. 예산감시 페이지 제작

감시 운동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예산감시 활동은 지난했습니다. 대전시는 의회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민은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나서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공개하는 양식도 분석이 어려운 PDF 파일이어서 정교하게 들여쓰기 한 표를 눈 아프게 쳐다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산감시 페이지는 조금 더 편리하게 예산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산감시 활동을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예산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전산화된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했고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큰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사는 시민이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예산서만 봐서는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감시 페이지는 원 데이터를 공개하면서도 그래프와 이미지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산감시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면서 30년간 이어온 시간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정보와 앞으로도 활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예산감시 활동은 더 촘촘해질 것입니다.



온라인 예산감시 플랫폼 '모니(MoNi)'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작)

#### 4. 데이터 기반의 감시 활동과 지방정부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

수익계약 전수 점검과 예산감시 페이지,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업무추진비 맞집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데이터가 표준화되어야 감시도 표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가 되어 있어도 기관마다 열의 이름이 다르고, 양식이 제각각이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행정기관도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나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감시 활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방정부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첫째, 공개 형식의 최소 공통 규격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그 공개 형식이 엑셀파일과 같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별·연도별 동일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관내에 있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공사공단과 산하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형식과 내용이 다 제각각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양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연도별로 양식의 변화를 기록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셋째, 사전공개 정보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다른 지방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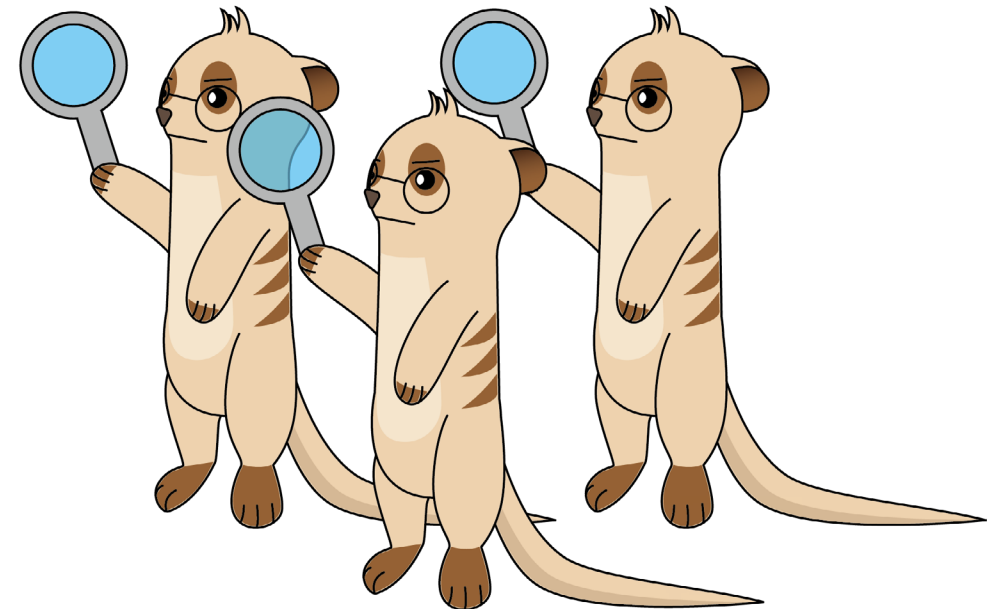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표준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노력하겠습니다.



#### 5. 나무를 넘어 숲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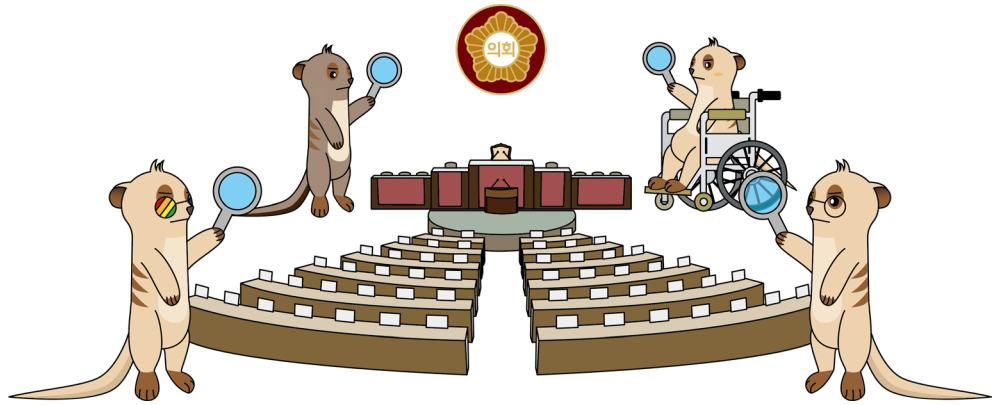
활동을 이어간다는 일은 과거를 고정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을 내일도 유효하게 만들도록 갱신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작한 소책자 표지를 나이트에서 착안한 이유도 같습니다. 나이트는 한 해의 기후와 토양을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걸어온 30년 또한 그렇게 겹겹의 기록과 연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의 나이트가 모여 단단한 줄기를 이루듯, 한 번의 정보공개, 점검, 시민 제보가 쌓여 오늘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그루의 나무를 넘어 숲을 바라보려 합니다. 숲이 되려면 나무 사이의 간격과 길, 바람길과 물길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단체 내부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어온 연대와 실천의 기풍을 본받아,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돌보며, 동시에 숲의 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이름과 눈으로 권력을 감시한다는 원칙을 내일의 언어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일상의 감시, 함께하며 확장되는 민주주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 더 넓은 참여를 상상하며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정혜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



## 1. 일상적 권력감시를 위한 시도 : 회의록 전수 모니터링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전수 모니터링을 시도했다. 대전시민과 함께해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정 감시 활동 중 하나다. 이 활동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시민이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이 함께 지켜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제7대 후반기 (2018.7.~2022.6.) 의정 활동을 포함해, 시의원들의 개별 활동 전반을 공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목표를 가졌다.

대전시의회 회의록 모니터링의 목적은 대전시의회가 본연의 책무인 ‘입법’, ‘대표’, ‘감시’에 충실했는가를 따지는 것이었다. 모니터링은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시정 질문, 5분자유 발언, 주민의견수렴, 회의 출석률, 조례 제·개정, 폐지 등 활동 등을 지켜봤다.

첫 번째 목적은 대의기관의 본질적 역할 촉구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주민 대표, 자치 입법 활동에 충실한지를 면밀히 살피고자 했다. 특히,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면밀히 살피려는 목적 아래,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이나



19.01.29. 대전시의회 모니터링 모임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에 머물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 제시를 했는지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는 의회의 투명성 및 윤리성 확보였다. 당시 일부 의원들의 영리 목적 겸직 문제(매년 6~7명의 의원 겸직 지적),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심지어 비루 연루로 인한 유죄 선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의 의정활동은 회의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회의 청렴도는 시민 신뢰의 첫 번째 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은 것(2019년 지적) 역시 모니터링의 윤리성 감시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세 번째는 시민 참여의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감시하려는 시민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의 태도를 평가했다. 특히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되는 등 시민참여의 한 통로를 거부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의회 스스로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 2. 전수 모니터링은 무엇을 남겼나?

4년 간의 전수 모니터링은 비판과 감시를 통한 시민참여를 만들고, 활동의 질적 향상, 대전시의회 변화 등을 유도했다.

대전시의회 모니터링은 매년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심층적인 회의록 분석과 정책 제안도 남기며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준비 없는 질의나 지역구 행기 발언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부여하여 의원들에게 ‘다음 회기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대전참여 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의회 간의 논쟁도 불러 일으켰다. 2021년에 8대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언론에 양적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 칼럼을 게시해, 해당 내용을 반박하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개 평가는 의원들이 스스로 발언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가장 큰 의의는 지방의회 감시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수백 쪽에 달하는 회의록을 분석하고, 이를 객관적인 지표와 시민 평가를 통해 연간 보고서로 발간하는 과정은 시민사회가 지방의회를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대전 시민들에게 ‘시민의 눈’으로 지방의회를 감시한 경험을 함께 나눈 경험이었다.

## 3. 더 나은 지방자치를 향한 지속가능한 감시 모색

그러나 회의록 전수 모니터링은 한계도 분명 있었다.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웠다. 매 회기마다 발생하는 수백 쪽의 회의록을 읽고 모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은 상근활동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상임위원회 1~2개를 선택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더라도, 지방의원의 질적 성장이 1~2회기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모니터링의 흥미, 효능감 등을 느끼기에도 힘들었다.

또한 연 1회 발표하는 대전시의회 모니터링 보고서는 많은 시민에게 확산되기 어려웠다. 더 자주, 쉽고, 재미있게 시민에게 읽혀지는 보고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새로운 시민 감시 모델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고민은 이후 영상, 뉴스레터 등의 새로운 시민 감시 모델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 4. 감시를 시민에게 되돌리다 : 뉴스레터 <띠모크라시>

회의록 전수 모니터링의 감시의 과정이 시민과 연결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감시 내용을 요약·번역해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것이 2022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띠모크라시(Ddemocracy)’다.

띠모크라시는 대전의 ‘D’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를 결합한 이름으로, 지방정치를 시민의 언어로 재구성해 전달하겠다는 선언이 담겨있다. 처음에는 대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원 포인트 감시 뉴스레터로 출발했지만, 이후 “더 다양한 이슈를 알고 싶다”는 구독자 및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감시의 주제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또한 뉴스레터에 시민 질문과 의견을 받아 다음 뉴스레터에서 다루기도 하며, 시민이 질문하고 감시 내용을 함께 구성하는 참여형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드디어 첫 <띠모크라시>가 도착했어요 🍌

<띠모크라시>는 대전 지방의회(시의회, 구의회) 이슈와 의정활동을 모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뉴스레터입니다. Democracy(민주주의)에 대전(Daejeon)의 D를 붙여 띠모크라시(Ddemocracy)입니다.

6월 1일(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띠모크라시>는 지선까지 두 번에 걸쳐 대전광역시회의의원(시의원) 후보자들을 낱알이 살 퍼블 예정이에요.

22.05.20. 첫 번째 발행된 <띠모크라시> 베타 버전

## 5. 감시를 넘어 지역 민주주의의 창으로

발행한지 3년이 넘은 띠모크라시는 지방의회 감시 콘텐츠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대전의 정치·행정·사회 이슈를 함께 다루는 지역 독립 미디어 형태를 띄며 성장했다. 조례 제·개정, 지역 예산, 주요 정책이슈부터 기성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소규모 활동, 시민 단체의 실천을 다룬다. 또 목소리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읽는 시민이 곧 감시자다”라는 원칙 아래, 감시는 특정한 활동가 집단에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띠모크라시는 감시를 기록 중심에서 참여와 공유 중심으로 재편하는 민주주의 장치가, 또 대전이라는 지역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민 기반의 창이 되어가고 있다.



# 오늘의 띠View

## 연대하는 시민 '평화'

오늘의 띠View 주인공은 요즘 띠모가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분입니다. 사실 띠모가 가지 못하는 현장까지 수많은 곳에 연대하고 있으시기도 한데요. '말벌시민\*'이라는 말에 딱 맞는 평화님과 함께했습니다!

\*말벌시민 :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즉각 달려가서 함께 행동하는 시민을 뜻하는 말.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도중 꿀벌을 지키기 위해 말벌이 나타나면 어디든 뛰어가는 '말벌 아저씨'에서 비롯된 신조어입니다.



25.07.23. 띠모크라시 인터뷰 코너 '오늘의 띠View' 중

## 6. 앞으로의 방향: 시민이 이어가는 감시와 정치적 상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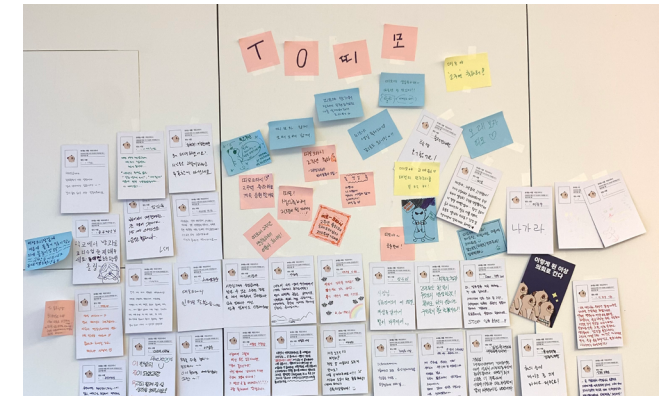
띠모크라시는 기록된 감시를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실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시민이 계속해서 이 감시를 묻고, 해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감시 자료의 공개, 참여 교육, 데이터와 도구의 공유 같은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시가 사유와 토론,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감시 결과를 단순한 '문제 제기'로 끝맺지 않고, 질문하고 개입하는 시민이 스스로 지역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감시가 지역 정치의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지나는 시민이 새로운 구조와 논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다.

이제 감시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묻고, 해석하고, 때로는 바꿔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감시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향하는 다음 실천이다.



24.05.31.-06.01. 띠모크라시 2주년 기념 팝업스토어



24.05.31.-06.01. 팝업스토어 방문자가 띠모에게 남겨준 편지

# 시민운동을 생활의 무대로: 여성위원회를 만나다

김미애, 김용분, 장은령, 전수경, 전희선, 조효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위원 인터뷰  
(특별 출연 : 김상기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위원회는 “여성 회원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첫발을 내딛은 이후, 줄곧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 축을 든든하게 지탱해왔습니다. 이들은 딱딱하고 경직된 시민운동의 문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 문제부터 지역 공동체의 필요까지 일상의 영역을 시민운동의 무대로 확장했습니다. 자원 활동과 봉사로 단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생활 정치’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져왔습니다. 여성위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운동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05.04.07. 여성위원회의 날

## Q. 여성위원회의 첫 출발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김용분** 처음부터 여성위원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 중심으로만 운영됐고, 그 안에서도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이었어요. 여성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따로 모임 자리도 없었죠. 그러다 “여성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요. 김영숙 선생님이 초대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분위기를 잘 이끄셨죠.

**전수경** 그때가 2004년이었어요. 그 시절 최교진 선생님(지금의 교육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계셨고,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죠. 김영숙 선생님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면서도 시민운동을 병행했어요.

**전희선** 저는 첫 모임이 기억나는데요. 집행위원회 끝나고 여성위원회 회의한다고 따로 식당에 모였어요. 김영숙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은령 언니도 계셨고. (웃음)



## Q. 여성위원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김상기** 옛날에 회원 사업이 엄청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활동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여성 회원 분들이 많이 함께해주시고, 특히 여성위원회에서 많이 힘주셨죠.

**김용분** 그럼요. 단체 내에서 봉사도 많이 했죠. 행사 한다고 하면 여성위원회에서 나서서 하고. 그래서 사실 사무국에서는 여성위원이랑 먼저 상의도 하고.

**김미애** 소식지 보낼 때 봉투 붙이던 것도 생각나요.

**전수경** 그때 후원회나 총회 같은 큰 행사를 하면 음식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여성위원회가 다 모여서 주먹밥 만들고, 집에서 뭔갈 해서 온 분도 있었어요. 저도 잡채를 만들어온 적이 있고요.

## Q. 여성위원 분을 각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그리고 여성위원회와 함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미애** 제가 대표로 말할게요. (웃음) 저는 결혼하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 처음 참여를 알게 됐어요. 사실 사회 문제엔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수경 위원을 만났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변화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 회의에 갔을 때는 너무 딱딱하고 무서웠어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시키고, 다들 정자세로 앉아있으니까 긴장돼서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무섭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세상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러면서 여성위원회에도 가입하고 같이 활동

하게 됐는데요. 저도 마음이 열리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게 됐어요.

## Q. 기억에 남는 여성위원회 활동이 있다면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07.04.06. 여성위원회 엠티

**장은령**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사탐방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부여나 금산 같은 역사 유적지를 가족 단위로 함께 방문했어요. 버스도 대절해서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 역사 공부도 하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 했어요. 참여의 활동이 ‘시민운동’이라기보다 ‘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계기였죠.

**조효경** 저는 학습준비물실 실태조사가 기억나요. 초등학교는 분명 의무교육이고, ‘학습준비물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거기서 다 충당을 못할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여성위원들이 대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다 조사했어요. 학교마다 자료를 모으니까 박스로 나오더라고요. 회의실 한 가득 서류가 쌓여있었어요. 그 이후로 학습준비물실이 잘 돌아갔죠. “우리의 조사로 학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어요.

**김미애** 저는 입시 컨설팅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민단체가 왜 입시교육을 하나”고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민운동을 일상으로 확장하고 싶었어요. 아이의 교육문제도



13.07.16. 초등학교 학습준비를 모니터링하는 모습



13.07.26. 대전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회문제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입시와 경쟁, 교육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했던 거죠.

**전수경** 저는 어린이날 행사가 기억나요. 정말 크게 행사를 했거든요. 회원 가족들도 다 모이고. 그리고 그때 “아이들도 참여의 회원으로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회원이라고 해서, 자녀 이름으로 회원 가입하는 운동도 하고 그랬죠.

**김용분** 저는 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 운동이요. 그때 강영희 선생님이 주도했는데, 석교동 ‘알짹’ 도서관에서 시작해 대전 여러 마을로 퍼졌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엄마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민운동이었어요. 그런 풀뿌리 운동이 탄탄해져서, 나중엔 ‘풀뿌리 사람들’이라는 단체로 발전하기도 했죠. 마을어린이도서관은 나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비를 지원할 만큼 성장했어요. 여성위원회가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Q. 여성위원회 활동이 개인의 삶이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시민운동이 삶에 준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전수경** 이번에는 제가 대표로 말할게요. (웃음) 아이를 키우면서 참여 활동을 했는데, 그게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예전엔 “공부는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참여 안에서 만난 선배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해주셔서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참여 행사에 가면 ‘참여 아이들’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서로 양보하고, 봉사활동을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그런 걸 보면 “시민의식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간에서 자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08.05.05. 2008 어린이날 한마당



13.11.14. 11월 여성모임 참을림

**Q. 올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오랜 시간 지켜봐 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걸 5글자로 말해주세요.**

**전희선** “젊은 단체로.”

새로운 세대가 함께하고, 젊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해요.

**김용분** “좀 더 가깝게”

제가 이제는 활동하진 않아서, 참여가 예전처럼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네요.

**조효경** “소통이 곧, 힘!”

계속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세대 간 소통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예전에 함께했던 분들에게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수경** “영원하리라”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장은령, 김미애** “젊고, 영원히!”

젊은 단체가 되면 영원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성위원회의 이야기는, 시민운동이 꼭 거대한 의제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이 교육, 마을의 도서관, 집에서 싸 온 도시락과 함께 꾸린 행사처럼, 일상의 문제를 시민의 언어로 바꾸고, 일상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연습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곳곳에 남아 있는 따뜻한 자취들, 어쩌면 그것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 모릅니다.

진행 설재균, 정혜용  
편집 정혜용

# 권력감시 현장에서 배운 것: 넓어진 시야, 약자의 목소리

김재곤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 인터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30년 여정의 한 페이지에, 잠시나마 뜨거운 열정을 바쳤던 이가 있습니다. 2019년, 청년공익 활동가로 6개월 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했던 김재곤 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권력 감시의 현장에서 세상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약자의 곁에 서는 법을 배웠다는 그의 이야기 속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한 청년의 삶에 남긴 숭고한 가치와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청춘과 시민 정신이 만났던 순간을 만나봅니다.



**Q.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청년 공익활동을 통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알게 되어 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권력 감시 등을 배워보고 싶었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활동했던 시기(2019년)의 대전 시민사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때는 허태정 시장 때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려고 되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 대전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Q.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시의회 권력 감시에 관심이 많아 재균 쌤,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대전시의회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또 시내버스 관련 좌담회 개최도 시도했는데요. 페이스북 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를 많이 못 낸 점이 아쉽습니다.

**Q.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시무식 때 신채호 선생님 생가에 갔던 것이 독특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또 김상기 팀장님과 함께 KBS 라디오 프로그램 참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대기하는 중에 종이접기 김영만 선생님을 만나 사진을 찍었던 것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Q. 그러면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나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이전에 있던 광고 회사나 학생 운동 등 그 바운더리의 의견만 계속 듣다가, 시민사회에 들어와보니 더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6개월 간의 활동이 재곤님의 가치관이나 이후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영향을 많이 줬죠. 대전참여 덕분에 강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소수이거나 외면 받거나 약자라고 치부되는 사람들을,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진 거죠. 이후 사기업을 가더라도 비윤리적인 곳은 안 가려고 하고, 급여가 적더라도 윤리적인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곳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Q. 활동해 보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회원들도 되게 잘 챙기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을 잘 잊지 않고 꾸준히 소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절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세대 교체를 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정치적인 참여도 같이 하고 권력 감시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입 활동가가 적응하고 오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Q.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 활동하던 당시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나요?**

요즘 시대가 다르다 보니, 밖에 나가야 될 일 (=외부 연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활동가의 외부 활동이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내부의 일까지 더해져 활동가 각자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가 리프레시하고 충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잘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대전 시민사회의 발전 뿐 아니라 대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조금 더 많은 대전 시민 분들이 가입해서 활동가가 좀 더 편하고 행복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행 설재균, 정혜용  
편집 정혜용



# 유권자 행동으로 정치지형을 바꾼 대전의 2000년 낙천·낙선운동

최충식  
전 총선시민연대 시민행동국장 인터뷰

2000년 봄, 대전의 거리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나쁜 정치를 심판하고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박한 구호가 도시를 뒤덮었고, 시민들은 익명의 차량과 아파트 베란다 현수막 아래에서 강력한 연대를 경험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총선시민연대 시민행동국장으로 활약했던 최충식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그의 증언은 '시민운동의 파위'를 만천하에 입증했던 그 시절의 뜨거운 기록입니다.



**Q. 먼저 시민운동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어요. 졸업 후, 사회활동을 하던 선배님들과 함께 민주주의 민주통일 대전충남연합의 재정사업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들무새 기획사'였는데요. 들무새는 순우리말로 남의 일을 애써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활동을 좀 했었죠.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1996년은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이 막 태동기에 접어들던 시점이었어요. 그때쯤 선배의 추천을 받아서, 1996년 8월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Q.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은 어떻게 기획하신 건가요?**

당시 환경운동연합이나 참여연대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의정 모니터링을 했고, 환경 이슈도 폭발적으로 많았으니까요. 언론도 시민사회의 이슈를 크게 다룰 때였어요. 당시 몸무게가 60kg이었을 정도로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지적해도 정책 위반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유권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잘하는 후보를 지원할지, 나쁜 후보를 떨어뜨릴지 등 고민이 많았어요.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나쁜 사람 한 명 떨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좋은 후보 지원은 못하더라도, 나쁜 사람은 (선거에서) 안 되게 해보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을 선정했는데요. 선거 기간에 특정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캠페인할 때 "낙천 대상자를 뽑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만 말해야 했던 게 기억 나네요. 대상자 선정 기준도 꽤나 엄격했어요.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했죠. 이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서 논쟁이 많았고, 기준을 정한 이후에도 누가 얼마만큼 기준 미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Q. 2000년 당시 대전의 정치적 상황은 어땠나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충청도는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의 지역 판이었어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다수가 자민련 소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소위 보스 정치가 극심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무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기 보스를 무시워했죠. 그 당시 시민들은 삼김정치(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몇 명이라도 해먹는다'는 인식이 높았어요.

**Q. 그러면 대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낙선 대상자였나요?**

대전은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나서, 낙선 대상자를 세 명 선정했어요. 대덕구는 이인구(무소속, 자민련 출신) 후보와 최환(자민련) 후보가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최환 후보는 과거 박종철 고문 사건 해결에 역할을 했던 검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컸습니다. 서구 갑에서는 이원범(자민련) 후보도 대상이었습니다. 이원범 후보의 상대는 당시 박병석 후보였고요. 우리는 이원범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음향장비를 활용해 "낙선 대상자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미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아침저녁으로 계속 캠페인을 했습니다.

**Q. 총선시민연대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총선시민연대는 각 단체에서 활동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총 10~12명 정도였어요. 저는 시민행동국장을 맡아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일을 많이 했어요. 캠페인 아이디어도 짜고요. 당시 시민들의 참여와 언론의 지지는 폭발적이었어요. 활동가들은 돈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었는데, 시민들이 모금하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Q. 성공한 캠페인 방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시위하기 위해 모이는 건 힘든 일 이잖아요. 시간을 2~3시간 정도 내야하니까. 그래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때 떠오른 게 차량 캠페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50대 가까이 되는 차가 모여서 마치 태극기처럼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달고, 경적을 울리며 이동하는 식으로요. 마치 첩보 작전처럼 진행했는데요. 정보를 알면 경찰들이 못 하게 막으려고 했거든요. 차를 몰고 잠깐 참여했다가 빠질 수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이외에도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달듯 낙선 대상자를 반대하는 피켓을 달기도 했어요. 이때 시민들의 지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Q.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변동사거리에서 아침 선전 운동을 하던 중, 이원범 후보의 선거

운동원과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될 때 “최모 국장이 폭행을 당해서 입원 치료 중이다”라고 과장되어 나갔어요. 이를 동안 난리가 났고,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후 이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여론이 뒤집어지면서 박병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나중에 선배들이 농담으로 “박병석이 된 건 네 덕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웃음)

**Q. 낙선운동을 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실 늘 그렇듯,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내부 활동가들 간의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웠죠. 실무자 간의 의견 차이도 꽤 컸고, 이로 인해 감정적인 대립도 있었고요. 각자의 본래 소속 단체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컸죠.

**Q. 낙선운동을 진행한 결과는 어땠나요?**

**또 단기적인 성과 외에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낙선운동으로 결국 대전의 낙선 대상자 3명 모두 낙선했어요. 이원범 후보는 박병석 후보에게 5% 차이로 패배했구요. 이는 총선시민연대의 엄청난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은 시민운동의 기본이 탄탄해지며 회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또 활동가들에게 시민운동이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자부심을 주었고요.

특히 정치권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게 큰 변화였어요.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낙선운동 이후 많이 바뀌었는데요. 유권자의 힘이 모이면 정치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도 이걸 기점으로 많이 변했어요. 의정 모니터링, 성명서 발표 등 활동에 무게감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시민운동 내부의 딜레마도 있었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세력화”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정치개혁시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개혁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대안 세력이 되어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세력이 나뉘게 되었죠.

결국 2004년 총선 때는 2000년처럼 단일 대오가 아닌 수십 개의 모임이 생겼고, 2003~2004년에 많은 활동가들이 정치권(주로 민주당)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운동의 방향이 모호해졌고, 낙선운동이 대안 없이 몇 사람 떨어뜨리는 네거티브 방식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반성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활동가 출신 정치인과 시민사회의 연계가 많이 끊어지기도 했죠. 결국 좋은 성과를 긍정적 대안으로 이어갈 다리가 놓이지 못하고 분열된 것이예요. 그게 가장 아쉽네요.

**Q.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포인트가 있나요?**

시민운동의 안정성을 위해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서 재원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이 현업을 떠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재단 같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또 활동가가 힘들 때, 내부에서 서로 잡아주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 돈과 자리(=커리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동지들을 챙기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Q. 지방자치 30년 및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주년을 맞았는데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해주세요.**

저에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든든한 조직입니다. 힘들더라도 권력 감시나 의회 감시 활동을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놓지 않고 해나가야 할 핵심 활동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가가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기보다는, 주변에 모니터링단 같은 함께 할 수 있는 ‘선수’를 키우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일을 잘하는 조직은 실무자가 일을 잘하는 조직이 아니라, 일을 잘시키는 조직이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밤새 혼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는 가짜 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먹히지 않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해법을 찾을 때 해외 사례를 찾아보거나, 기존 선배 활동가들과 현역 정치인,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는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만드는 게 필요해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고 꾸준히 성장해나가는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낙천·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퇴출을 목표로 전개한 낙천/낙선운동은 공천 반대, 공천 철회, 낙선운동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2000년 1월,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헌정파괴 등 7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총 108명(1차 66명, 2차 42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며 공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도 병행되었다. 최종 공천 반대자 102명 중 64명이 공천되자 이에 대한 공천 철회 운동을 이어갔다. 이후 2000년 4월, 공천된 64명과 추가 22명을 포함한 총 86명의 최종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이 운동의 결과 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이 낙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영남 지역에서는 낮은 낙선율을 기록하며 지역주의 장벽을 넘지 못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총선시민연대' 참고

진행 김재섭, 정혜용  
편집 정혜용

#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의 핵심동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수현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치분권국장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3대 지방살리기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추진했다. 그 중심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동반자이자 현장의 실천가로서 치열하게 움직였다. 그 선봉에 있었던 조직이 바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였다.

당시 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치분권 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뛰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간영역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사무국,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사무국을 맡을 정도로 전국적 위상을 가진 시민단체였다. 자치분권·신행정수도·국가균형발전이라는 3대 의제 추진에 있어, 정부와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를 잇는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김제선 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 김수현 자치분권국장이 사무국장, 금홍섭·박상우 국장이 실무 협업을 맡아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체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며, 후속 대응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불문법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그 결정은 충청권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태였고,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민관과 정파, 지역을 초월한 연대가 이루어졌다.

신행정수도법대전시민연대와 신행정수도법 충청권협의회가 결성되었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가 그 사무국을 맡아 실질적 대응을 이끌었다. 연기군과 대전, 공주, 서울 대학로와 종로 일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시민들은 '행정수도는 국민의 명령'이라 외쳤고,



우리는 전국과 지역 언론, 방송을 통해 위헌 결정의 부당성과 행정수도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끊임 없이 알렸다. 서울역 등 수도권에서도 거리 홍보전을 이어가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당시 조치원과 대전에서는 매일 밤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청년과 시민, 노동자, 학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토론하며,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열망을 하나의 불길로 모았다. 그 뜨거운 분노와 헌신의 시간이 결국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법은 훗날 세종시의 법적·정치적 근거가 되었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단단한 토대가 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지역운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공간구조와 정치문화를 새롭게 설계한 국민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날의 헌신과 투쟁, 연대와 땀방울은 오늘날 세종시의 빛나는 현재를 가능하게 한 시민의 기록이자 민주주의의 발자취로 길이 남을 것이다.

##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운동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신행정수도 이전 운동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했다.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특히,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좌절된 이후에도,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역 사회의 힘을 결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신행정수도/행정도시 건설 정상 추진 대책 활동'을 통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이 활동은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MB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를 저지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후속 조치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단순한 권력 감시를 넘어, 시민의 힘으로 국가 정책 변화를 견인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0년사  
(아름다운 대전을 위한 시민의 힘) 참고

# 산내 골령골, 시민이 밝혀낸 국가폭력의 역사 : 끝나지 않은 진실 규명의 여정

심규상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  
(현 오마이뉴스 기자) 인터뷰

대전 산내 골령골. 오랫동안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그곳의 진실은, 한 사람의 꾸준한 기록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90년대 초, 잡지 한 장의 기사에서 시작된 관심은 현장으로, 그리고 시민사회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골령골의 유해 발굴과 진실 규명 과정에는 수많은 벽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로, 또 기자로, 심규상은 시민의 시선으로 국가폭력의 흔적을 좇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열정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기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Q. 골령골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이 문제를 오래 취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수감되어 안동교도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월간 「말」을 정기구독했는데, 어느 날 표지에 “대전형무소 4,300명 학살사건”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대전에서 4년을 살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기사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기를 살고 있던 수형자나 보도연맹원들을 절차 없이 끌고 가 학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출소하면 반드시 이 사건을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출소 1년 후인 1993년, 직접 산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옥수수 알갱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땅 위에 흩어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이빨과 뺨조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이곳이 정말 ‘학살의 현장’이라는 것이 실감났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말을 아끼더라고요. 40년이 넘게 ‘말하면 안 되는 일’로 굳어진 침묵의 공기 속에서, 이 사건은 철저히 지워진 역사였던 겁니다.

**Q.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벽은 ‘자료와 증언의 부재’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디에 가도 자료가 없었어요. 대전 교도소, 경찰서, 법무부, 국방부 등 모든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그런 기록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학살 피해를 증언해줄 주민들도 대부분 말을 아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유해가 발견될 때마다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은 “시청으로 가라”, 시청은 “구청으로 가라” 하고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2000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명의로 대전시와 동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쟁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묻힌 지역이니,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1년 후 현장을 가보니 교회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뼈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곳이 그곳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엔 행정의 책임감도, 인간적인 고민도 없었습니다.

**Q. 그런 상황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당시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 사건은 위험한 주제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 일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주체였어요. 1999년 ‘노근리 사건’이 AP통신을 통해 알려지자, 우리는 곧바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안에 ‘산내학살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인 그해 12월, 제4·3 유족인 고이도영 박사가 미국에서 학살 사진을 발견해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대전 인근’이라고만



1950.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기록 사진

적혀 있었는데, 현장 대조를 통해 그것이 바로 골령골임을 확인했어요. 이 사진이 한국일보에 단독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일었고, 2000년 2월 월간 「말」에 제가 골령골에 대한

장문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50년 넘게 감춰졌던 골령골 학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뒤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유족들을 모아 ‘유족회’를 결성했고, 2000년 7월 첫 공식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유족들이 50년 만에 처음 그 땅을 밟으며 오열하던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후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의 토대가 된 특별법 제정 운동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죠.

**Q. 국가 권력이나 기관의 방해로 직접 겪으신 적이 있나요?**

정말 많았죠. 유해 발굴을 요구하면, 전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회피했고, 현장 조사를 하면 경찰이 찾아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1년 교회 건축 현장에서 유골이 드러났을 때, 구청은 이미 해당 부지에 ‘적법한 허가’를 냈다며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국가적 은폐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속에서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국가가 외면한 진실은 결국 시민이 밝혀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Q. 진실화해위 발족 이후에도 어려움이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가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해 발굴은 예산 부족과 토지 등의 문제로 지연되었고, 현장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행정안전부의 ‘전국 추모공원 공모’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는 이 길뿐이다’ 싶었어요.

그 후에 유족회 회의에 이 소식을 알리고, 직접 TF팀장을 맡았습니다. 그 동안 매번

싸우던 동구청과 시청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반대하던 토지주와 교회 목사님까지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2016년 여름, 골령골이 전국 추모공원 조성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Q.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오며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죠.**

네. 처음엔 단순히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끝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공주, 아산, 홍성, 서산 등 충청권 곳곳에서 새로운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유족들이 찾아와 “우리 부모님이 여기 묻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젠 기자라기보다 ‘유해를 찾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 결국 제가 해야 할 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구리 굴 안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나를 이끌고 있는 일이구나.’



2007. 산내 골령골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 현장

**Q.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05년까지 국가는 침묵을 넘어 방해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의 변화는 미약했습니다. 만약 행안부 전국 추모공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삭감, 안내판 설치 거부, 추모사 거절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반복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년 착공될 추모공원이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의 과거를 성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Q.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실 규명의 끝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이 ‘과학 도시’의 포장 뒤에 숨은 ‘군사 도시’의 구조에서 벗어나,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위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함께 평화 인권 도시를 향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골령골의 진실 규명과 추모공원 조성으로 대전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5.06.27. 대전산내골령골학살사건 제75주기 제26차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1950년 6월 28일경부터 7월 17일 새벽 사이에 충남지구CIC, 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이 민간인들을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 살해했다. 학살 장소는 골령골 골짜기 일대로 암매장한 구덩이의 길이가 각 100m, 200m에 달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학살이 자행되었다. 암매장 구덩이를 모두 이으면 전체의 길이가 무려 1km다. 희생자 수는 최소 1,800명에서 최대 7,000명까지로 추산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자세히 보기**



진행 설재균, 정혜용  
편집 정혜용

# 흔들리는 토대 위에 피었던 꿈: 대전 NGO지원센터 폐쇄가 남긴 제도화의 숙제

조미선  
전 대전 NGO지원센터 사무처장 인터뷰

대전 시민사회의 성장을 상징했던 대전 NGO 지원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2014년, 작은 단체들의 공간 부족 해소와 공익 활동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문을 열었던 센터는, 청년 활동가를 육성하고 지역 의제를 만드는 시민사회의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에만 급급했던 불안정한 제도적 기반은 결국 이 공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인 행정 결정 속에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센터의 이야기는, 시민사회의 숙원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명암(明暗)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센터 설립을 주도하고 폐쇄까지 함께한 조미선 전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Q. 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된 당시 대전 지역 시민사회의 특성 및 환경은 어땠으며, 센터가 필요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NGO 지원센터는 약 10년 전,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안됐어요. 당시 대전 시민사회는 작은 단체들의 교육 및 총회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기에, 시민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쓰일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죠.

그런데 설립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센터 설립이 공약으로 제시된 당시 권선택 시장 당선 이후, 이런 제도화 과정을 시민사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결합하는 작업이 부족했어요. 그 결과, 행정에서 급하게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만들었고,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시민사회 활동 지원 및 체계 구축'과는 다르게 단순 센터 '설치'에만 초점을 맞춘 불안정한 조례가 된 거죠.



2024년 비영리단체 신년교류회

그래서 이후 허태정 시장 재임 시기, 불안정한 '설치 조례'를 대신하고자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 조례」를 만들어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시장이 다시 바뀌며 바꾸지 못했어요. 이 불안정한 제도적 기반은 결국 센터가 폐쇄되자 힘을 잃었어요. 센터 폐쇄로 근거가 부실해진 조례는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Q. NGO 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입니다. 센터가 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미션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지역 사회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고유 목적 사업을 지원해보자는 게 있었어요. 시민사회의 활동력을 키우고, 고유 목적 사업 지원을 통해 공익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어요.

또 활동가들의 연차가 쌓이고 노후화 문제가 있다보니, 젊은 세대의 활동가를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활동가로 남지 않더라도 회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는게 미션과 기대였죠.

**Q. 센터 운영 기간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뭐가요? 혹은 대전 시민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유도 말해주세요.**

먼저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 워크숍, 송년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의제에 접근하고, 행사도 기획하게 했어요. 그렇게 활동가로서 성장하고 함께 연결될 기회를 제공했다고 봐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청년 활동가들이 배출되었으니까요. 지금 참여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관 문제도 많이 해결됐어요. 당시에도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협업실 등을 갖추어



2022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활동 공유회

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죠. 활동가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마지막으로 활동가 연구지원사업도 기억에 남는데요. 현장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정한 연구 의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화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Q.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했던 사업도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청년공익활동사업도 꾸준히 했고, 그걸 통해 결국 단체 활동가로 남긴 게 가장 기억에 남죠. 이렇게 청년들에게 경험 뿐만 아니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게 뿌듯하죠.

토론회도 같이 많이 했어요. 예전에 '대전 시민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시도했고요. 지역 의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참여가 있어서 할 수 있었죠.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많은 도움이 됐죠.

**Q. 센터가 개별 NGO의 역량뿐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도움이 됐었나봐요. 공간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을 전국 회의에 가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 지원했던 청년활동가들을 여전히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지역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죠.

**Q. 센터는 2024년 12월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직접적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폐쇄 과정에서 겪었던 행정적/정치적 논의나 절차는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2022년 이장우 시장이 당선되면서 인수 위원회에서부터 언급됐어요. 대전NGO지원센터와 대전사랑운동센터의 통폐합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NGO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어요. 인수위원회 이후,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말해서 그래도 유지하는 형태였어요.

2024년에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영터리 연구용역이 있었는데요. 대전NGO지원센터가 흔히 아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이런 몇 군데 단체만 지원한다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강력하게 항의해, 결국 연구보고서를 내린 적이 있어요. 정확한 조사도 없었고, 당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그 누구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도 왜곡된 보도를 했어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던 와중에 2024년 8월, 센터를 12월 31일 계약 종료로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받았어요. 센터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나 공론 과정 없이 그냥 계약 종료가 됐고, 그렇게 폐쇄된 거예요.

**Q. 센터가 지속되지 못하고 폐쇄된 것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은 뭔가요? 그리고 만약 설립 초기 혹은 운영 중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 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폐쇄에 대한 대응은 있었어요. 시민사회에서는 성명 발표와 항의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다뤘죠. 그치만 이걸 결국 소통하지 않는 행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불통의 행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센터가 폐쇄되더라도 공간은 남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공간이라도 있으면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센터 설립 제안자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서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제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만드는 것부터 다시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결합해서 함께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Q. 대전지역 시민사회 현장에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긍정적, 부정적 변화 모두 말해주세요.**

긍정적인 변화는 타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많이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활동도 다채로워진 것 같고요. 새로운 의제 접근도 좋고, 주체적인 활동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좋아요.

부정적이 아니라기보단 걱정스러운 것은 다들 활동할 때 힘들어보이기도 해요. 활동가들이 소진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푸는 나름의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활동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돼요. 공익활동가 주간에다 다 같이 모이긴 했지만, 더 자주 모여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어요.

**Q. 센터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사회 지원 조직이 다시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와 핵심 조건을 갖춰야 지속 가능할까요?**

우선 기본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사회기본법 등이 논의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법에 따라 지역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활동을 만들지는 우리 안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진으로 보는 대전 NGO지원센터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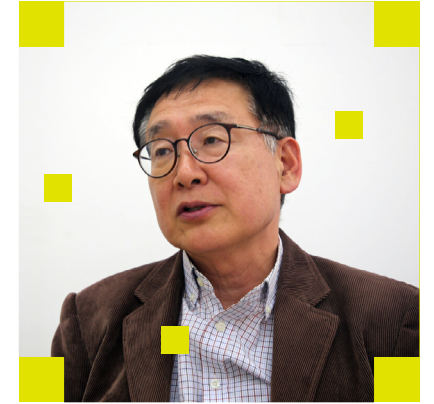
**Q. 짧지 않은 기간동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지켜봐오셨는데요. 앞으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의제로 만들어내고, 젊은 감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띠모크라시>처럼 실시간으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상깊었어요. 과거에 비하면 새로워진 거죠. 시민과 함께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보여서 좋고,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진행 설재균  
편집 설재균, 정혜용

# 지방자치 30년, 대전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취와 권위주의의 그림자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 결함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시대적 소명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단체장 직선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진화해 온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여정의 지방자치 제도사를 되돌아보면,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는 넘치도록 들렸지만 ‘지방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유독 낮설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에 집중한 지방분권 담론은 정치적 엘리트들의 언어였고, 정작 주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에는 소홀했다. 지방분권이 중앙과 지방 엘리트 사이 권력의 구조적 재편이라면, 지방민주주의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의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 속의 자치를 의미한다. 이 둘의 균형이 깨질 때 지방자치는 소수 지방 권력에 의한 ‘그들만의 게임’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간극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 즉 ‘민주성 결함 (democratic deficit)’에서 비롯된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제도적 틀은 작동하지만, 선거 후 주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동적 객체로 머물게 된다. 정책은 ‘대의(代議)의 이름으로’ 소수 엘리트와 행정 관료 사이에서만 순환하고, 주민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일상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제의 결핍을 보완하고 주민을 행정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세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풀뿌리민주주의’ (grassroots democracy)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의 직접 참여와 숙의를 제도화하여 권력의 수평적 분산을 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풀뿌리민주주의 제도적 실험의 대표적 예가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이다.

## 전국을 선도한 대전의 풀뿌리민주주의 제도 실험

대전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07년에 주민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며 재정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특히 민선 7기에는 ‘주민주권 실현’을 선언하며 제도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면서 전국적 선도 모델로 주목받았다.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2019년 30억 원에서 2022년 200억 원으로 약 7배 가까이 확대했다. 이는 주민 제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참여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재정 통제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 제안을 넘어 정책숙의형을 도입,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등 복잡한 정책 의제를 숙의 총회에서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참여예산제를 시민 학습과 숙의 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학습장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동참여형(마을계획형)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예산을 연계하여 생활 현장의 의제를 공동 결정하는 다층적 구조를 완성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단계별 구조와 다층적 사업 유형의 혁신성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주민자치회 실험은 대전이 풀뿌리 자치의 선도 지역으로 주목받게 한 핵심 동력이 되었다. 2019년 4개 자치구 8개 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대덕구, 서구, 유성구는 전 행정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제도를 정착시켰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기관이 아닌, 마을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며, 실행과 평가까지 담당하는 '주민총회 → 의제 발굴 → 실행 →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이는 대의제가 포괄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주민의 통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대덕구 송촌동이 3년 연속(2020~2022)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 사례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내동(서구), 신성동(유성구), 신탄진동, 덕암동(대덕구) 등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대전이 시 전역에서 풀뿌리 자치 역량을 균형 있게 성장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지방자치가 삶의 문화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웃 간의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이 복원되는 효과까지 창출했다.

## 민선 8기, 권위주의 '색깔론'에 무너진 풀뿌리민주주의 제도적 기반

대전이 이룩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취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급격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장우 시장 취임 후 추진된 정책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과 색깔론에 기반하여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일방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시장 취임 직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고, 시민 제안 건수 역시 2,600여 건에서 현재 100여 건대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예산 삭감과 제도 변경은 시민 공론화나 협의 절차 없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위반되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재정 통제권을 침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와 합의 과정을 무시한 하향식(Top-down)

행정의 독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민 참여 활동의 핵심 인프라였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NGO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해체이다. 대전시는 이 조직들을 “특정 진영의 거점”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낙인을 찍고 해체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지원 중단, 위탁 종료 통보 등이 사전 숙의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되었다. 이 조직들이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행정과 시민사회를 잇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되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권위주의 행정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이들의 해체는 단순히 행정조직의 축소를 넘어, 대의제의 결핍을 채워주던 시민 참여와 학습의 공간을 폐쇄한 것과 같다.

## 대안과 발전 방안: 권위주의를 넘어 시민 주권 시대로

대전의 후퇴는 지방자치의 위기가 아닌, 민주주의 가치의 위기로 볼 수 있다. 대의제의 결핍을 채우고, 권위주의 행정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다시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한 복원과 재설계가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풀뿌리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 참여 제도의 법적·제도적 안정성 강화가 요구된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시장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최소 규모를 특정 비율이나 하한선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는 예산 삭감을 막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또한 제도 변경이나 축소 시 공청회, 주민투표, 시민 공론화 등 숙의 과정을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도 법 제도화가 완결되어야 한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완 상태로 남아 있다. 10년이 넘도록 제도가 제도답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려는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읍면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 단위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단순 법제화를 넘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의제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정책에 반영될 의무를 조례 등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전문적 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신분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체된 중간지원조직을 재건하고, 이들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공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자치단체장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시민사회, 학계, 행정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의 시·구·동 간의 협력체계를 복원하고, 민관협치 관련 조례 등을 재정비하여 숙의와 합의를 행정 문화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 30년, 대전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과거의 성취를 되살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대의제의 결핍을 채우고, 권위주의적 행정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다시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대전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의 복원은 곧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월평공원, 속의의 힘으로 지켜내다: 도시 숲을 지켜낸 사람들

양홍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은희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월평공원은 한때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개발 계획 아래, 대전 최대의 도시 숲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곳을 단순한 '유희지'가 아니라 도시의 생명선이자 모두의 자산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민, 환경단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며 "도시의 숲은 시민이 결정한다"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한 반대 운동을 넘어, 시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해 행정의 방향을 바꾼 '속의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 싸움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월평공원을 지키며 시민들이 만들어낸 속의의 과정과 그 연대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 Q.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활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양홍모** 많은 분들이 월평공원을 조성된 공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심 속 숲이에요. 이미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1998년 갑천 우안 고속화도로 계획을 시작으로, 2004년 실내 테니스장, 2007년 관통도로 등 개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시민사회가 나서 계획을 막았고, 이런 경험이 쌓여 "월평공원은 지켜야 할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반대 운동도 그 연장선이었죠.

**정은희** 주민들은 집 뒤 산에 3,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주지에서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 곳이었던 거요. 주민들 사이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공감이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주민대책위를 꾸려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정동** 2017년 2월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간사단체였고, 자연스럽게 대책위 간사단체 역할을 했었고요. 당시 연대기획국장이었던 저는 대책위 상황실장을 맡았고, 2018년 이후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회의진행, 대전시와의 협의 등의 역할을 맡았어요.



월평공원 전경 (대전충남녹색연합 사진 제공)

**이경호** 월평공원은 개발과 타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역사가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당시 저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국장으로서 함께했구요.

## Q. 반대 논리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도 있었나요?

**양홍모** 핵심은 '공공재'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월평공원은 특정 소유주의 땅이 아니라, 시민과 미래세대의 자산이에요. 시민들은 산책하고, 공기가 순환되며, 아이들이 생태를 배우는 공간을 함께 누리려왔죠. 행정이 이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경호** 2016년부터 주민대책위와 함께 1인 시위, 기자회견, 천막농성 등을 이어갔습니다. "월평공원은 축복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 말대로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은 드뭅니다. 많은 시민이 그 가치에 공감해주셨어요.

**정은희**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며 주민들에게 결정을 떠넘기다 보니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마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해 2,000여 명의 서명을 모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 Q. 기후 위기 시대에 월평공원이 도시에 주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셨나요?

**양홍모**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탄소를 흡수할 숲이 필수입니다. 월평공원은 도심 속 탄소 흡수원이자 미세먼지와 도시온도 저감, 생태 보전의 핵심 공간이에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깨워주는 곳이죠.

**이경호**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공원이라는 건 관리가 어렵거나 버려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생명의 땅으로 남겨두는 것,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06.02. '대전시는 갑천-월평공원 아파트 건설사업 중단하라' 기자회견 (대전충남녹색연합 사진 제공)

## Q. 시민 속의 공론장은 어떤 계기로 추진되었나요?

**김정동** 2017년 2월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며, 대책위는 시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구요.

대전시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책위가 참여하면서 농성을 중단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의체 내에서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2018년 1월 민관협의체는 제3기관을 통한 공론조사를 통해 월평공원 존치여부를 논의 하며 공론 조사가 시작됐구요.

## Q.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공원의 가치를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김정동** 절차적인 과정과 내용적인 문제를 별도로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절차적으로는 월평공원은 대전 중심에 여러 동에 걸쳐 있는 공원인만큼 아파트 개발로 인한 피해와 공원을 잃는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어요.

내용적으로는 주요하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실제 난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환경적으로 중요한 도심내 녹지를 없애는 사업이라는 점,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대란과 당시 서구, 유성구의 신규 개발 억제에 약속했던 시장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Q.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 결과가 나왔을 때 감회는 어떠셨나요?**

**이경호** 너무 좋았죠. 시민들이 이긴 싸움이었어요. 당시 허태정 시장도 속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며 논란이 생겼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긴 허태정 시장이 비겁했어요. 그래도 이런 속의 과정 결과가 있었기에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은희** 그날을 2018년 6월 14일로 기억해요. 도시계획위원회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이 부결된 날인데요. 만에 하나 부결이 안 되면 쳐들어 가야 하나 하는 고민도 했거든요. 부결 소식을 전달 받은 순간에는 “이제 됐다”는 생각과 함께 안도감이 들었어요. 고된 활동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함께 해온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감사했죠.

**양흥모** “다행이다”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 습니다. 월평공원을 지켜낸 것도 있지만, 함께 싸워온 시민단체들이 무너지지 않게 됐다는 게 큰 위안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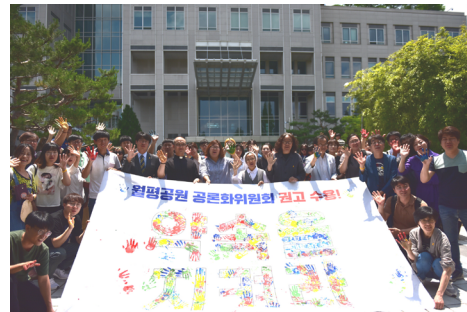
**Q. ‘민간특례사업 부결’이라는 결과가 대전의 속의 민주주의에 남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정동** 속의 경험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실제 속의민주주의에 대해 무작위로 참여한 시민 들이 과연 속의를 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여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본인의 결정이 대전시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토론과 숙의에 참여했어요.

이 경험은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에도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시민을 선택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면 그 결과가 충분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양흥모** 시민 의사의 공식적 반영이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었죠. 토지 소유자에게 장기임대, 재산세 감면 등 여러 대안도 제시했구요.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 단순 일방행정이 아닌 절차를 거쳐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공공 갈등을 해결 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의미도 있고요.



19.06.12.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 촉구 집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사진 제공)

**Q.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정당, 그리고 시민 분들도 함께한 과정이었는데요. 혹시 내부 갈등은 없었나요?**

**김정동** 시민단체 연대기구는 역할분담, 행정 절차의 경험이 있다보니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시민들이 참여 하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정보제공도 충분히 하고, 과정에 대한 설명도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분노도 있습니다.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은 생각 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끼는 점을 이해하고 잘 대처할 필요가 있죠.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전략과 시민이 생각하는 전략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갈등도 생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느 때는 행정과 시민 사이에 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양흥모** 내부 갈등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도 함께 했기 때문에 행정과의 싸움도 잘 됐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운동 방식이나 결정 내용에 대한 차이로도 시민단체 간 의견도 차이가 있었고, 주민대책위와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목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승리 할 수 있었죠.

**이경호** 서로 입장이 갈리면서 공론화 과정이 3개월 정도 멈춘적이 있기도 해요. 다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진행을 했구요. 진행 중에 외주 업체, 시민 추첨, 대전시 입장 등을 정리하면서 의견 간 충돌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었죠.

**정은희**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가 함께하다 보니 의견 충돌도 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서로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죠.

**Q. 시민들의 연대를 실감하며, 긴 싸움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정은희** 결국 힘이 된 건 월평공원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함부로 허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가 원동력 이었어요. 시민의 숲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싸움 과정에서 안 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매일 시청 앞과 갈마동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108배를 하기도 했어요. 건설 반대 인간띠 잇기도 해봤고요. 주민 분들과 농성장도 번갈아가며 지켰고 투쟁 자금도 지원해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함께할 수 있었죠.

당시 ‘월평공원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며 기초의원출마도 했었는데요. 비록 낙선했지만, 사업 부결 이후 주민들이 “정은희만 공약을 지켰다”고 말했을 때는 감동이었어요.

**양흥모** 다양한 주체들이 해왔던 스타일이나 결정 방식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핵심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되어 일을 진행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연대 고요. 작은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유로 고립됐다면 분명히 잘 안됐을 거예요.

**이경호**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치만 함께했다는 연대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마지막에 축하파티를 했는데요. 밥먹고 파티 하면서,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었어요. 긴 시간 2~300명이 모여서 속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민 분들이 고생이 많았죠.

**Q. 개발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월평공원.  
앞으로는 어떤 도시공원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흥모** 이제는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도시숲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과거 일몰제 같은 경우도 사업자들에게 넘길 생각이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연구를 통해 도시숲 관리의 단계적/중장기적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은 그런 관점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장기간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세금 감면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재원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립도 할 수 있는거죠. 그런 면에서도 접근하는 게 필요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는 게 월평공원입니다.

**이경호** 월평공원의 가치를 살려 생태녹지 보호 지역으로 위상을 격상할 필요도 있어요. 동네 뒷산 공원이 아닌 시립공원 등으로 가치를 높이고, 대전시가 숲으로서 영구 보존을 선언 해야 합니다. 홍콩의 마이포 습지처럼 절대 보존 지역으로 설정하여 생태계 공간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해요.

**김정동** 공적인 시설,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대부분 같습니다. 이용자, 전문가, 행정의 머리를 맞대야 해요. 서로 고민하는 지점이 다르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월평공원 같은 경우 보전, 개발, 유지, 보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일상적인 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월평공원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중장기 전략을 같이 만들고,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정방향이 있는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월평공원과 갑천의 모습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우희철 사진 제공)

**정은희** 시가 허무맹랑한 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개발 논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민간특례사업 부결 이후에도 주민 분들이 ‘정말 아파트가 안 들어오는 것이 맞냐’며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걸 주민들이 월평공원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기에 전처럼 쉽게 무언가를 하긴 어려울 거예요.

이후에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고등법원은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보존하는 것이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어요. 정치인들도 이 판결을 통해 공익이 무엇이며 공공의 선택이 어떠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진 제공)

**월평공원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 2017. 02. 13.
  -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구성
- 2017. 10. 1.
  - ☞ 시민대책위/주민대책위 천막농성 시작
- 2017. 12. 15
  - ☞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 및 천막농성 중단
- 2018. 09.
  - ☞ 공론조사 시작
- 2018. 12. 08.
  - ☞ 1차 숙의토론회 진행
- 2018. 12. 15.
  - ☞ 2차 숙의토론회 진행
- 2018. 12. 21.
  -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조사 결과 발표
- 2019. 06. 14.
  - ☞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공론조사 결과**

- ☞ 시민숙의단의 60.4% 민간공원특례사업 반대
- ☞ 공론화위원회는 대전시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

진행 설재균  
편집 설재균, 정혜용

# '참여'와 '자치' 사이에서: 30년 간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금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창기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정동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어디에 가든 늘 진지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번엔 조금 다른 장면을 펼쳐보려 합니다.

회의록 대신 기억으로 하는 대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 Q. 처장 재임 동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김재섭** 피모 캐릭터 제작과 저작권등록이요. 왜냐하면 단체 이미지를 다채롭게 만들어줬고, 실제로 귀여워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단체를 소개하는 짧은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김정동**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요. 합법적(?)인 공공시설 폐쇄라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긴 시간(2014년~2020년)동안 지역의 시민, 언론, 행정, 정치,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문창기** 행정도시 정상추진 운동을 들겠습니다.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고, 결국 세종시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단체가 함께 한 운동이었고, 덕분에 충청권의 많은 선배들과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종합적 권력 감시 운동체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 감시 운동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대전지역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 Q. 처장 재임 동안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만 꼽아주세요.

**김재섭** 아무래도 머리스타일이죠. 제가 머리가 짧은데, 언제 한번은 수염도 길러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들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수염을 자르라는 뜻인줄 알았는데 머리를 길렀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의외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정동**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이 활동가 2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실 순 없으니까 임원 1~2명만 초대해 사무실에서 술 마신 것이 기억에 남네요.

**문창기** 어느 날 사무실로 우성이산에 있는 동호인주택에 사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호인주택 출입로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석탄을 이용한 실험을 하면서 악취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못하게 막는 시위를 대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지만, 참여가 그만큼 지역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홍섭** 1998년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대전광역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내역 일체를 공개받았을 때, 세부 영수증에서 유천동 유흥업소 '결떡쇠'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적인 관행으로 여겨 지던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 Q. 선임/후임 처장에게 "이것만들은 정말 잘 이어줬다/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단체 활동 또는 문화는 무엇인가요?

**김재섭** 활동가들의 판단을 믿고 존중하는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동** 일은 되게 하자는 것. 그리고 활동가는 일부라도 바꿀 것이냐,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갈 것이냐 늘 고민하지만, 가능한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것. 잘 이어준 건 안식월과 대체 휴무 안착이요. 경제적 보상이 부족한 단체 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안식월과 대체 휴무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창기** 마땅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금홍섭**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시민사회운동이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권력감시 단체의 재정 독립성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활동을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었습니다. 이는 조직의 운영뿐 아니라 시민운동의 생명력을 지키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Q.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 중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김재섭** 회계 정리를 하는데 165원인가 안 맞아서 3일 간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네요.

**김정동** 회보담당 간사일 때 기존 디자인을 같이였고, 예쁘다고 생각한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회보가 혹평받은 일. 일 제대로 안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네요. 그때 디자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창기** 무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홍섭**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고 지우고 싶은 기억은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지연된 점입니다. 특히, 재정 적자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전가한 점은 활동가로서 가장 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 Q. 처장 직함 외에, 참여에서 발휘했던 가장 의외의 숨겨진 능력은 무엇인가요?

**김재섭** 사무처에서 유일한 운전자여서 운전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정동** 고기 굽기. 워크샵 등에서 고기굽기 전문가(3급)로 인정받았어요.

금홍섭 재임 시절, 사무실 화초 관리와 각종 집회·캠페인에 사용할 그림 및 조형물을 제작했던 소탈한 기억이 납니다. 특히 20개가 넘는 화초를 정성껏 관리했는데, 사직 후 6개월 만에 사무실을 방문하니 1~2개만 남아있더군요. 화초관리 및 그림 그리고 및 조형물 제작은 나름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함께 활동했던(하고 있는) 활동가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요?**

**김재섭** 여러 한계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김정동** 내가 재미있게 활동하는지 늘 고민하시길. 활동가가 하는 모든 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주제, 방식으로 재밌게 하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활동하길 바라요.

**문창기**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 중 가장 어렸던 활동가도 40대를 훌쩍 넘겼네요. 모두 각자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한 끼 합시다.

**금홍섭**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했던 동지들 (회원, 활동가, 후원자 등)이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수많은 만남과 도움 속에서 맺어진 그분들과의 연대가 본인은 물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연대의 힘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와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게 5글자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축하합니다 제외!)**

**김재섭** 즐겁게 함께  
**김정동** 살아남았다  
**문창기** 날아라 참여  
**금홍섭** 연대가 최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년,  
역대 사무처장**

**1995~1996**

**이종재**  
초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997~2006**

**김제선**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07~2012**

**금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3~2017**

**문창기**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8~2022**

**김정동**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23~현재**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3부  
함께 외친 목소리,  
우리의 연대

# 시민이 만든 광장, 민주주의의 무대

김황식  
사단법인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이사

## 광장은 민주주의의 얼굴이다

도시의 광장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시대적 요구가 모여드는 민주주의의 상징적 무대다. 대전의 광장 역시 그러했다. 대전역과 중앙로에서 터져 나온 민주화의 함성, 은하수네거리에서 타오른 촛불, 으능정이거리에서 이어진 생활 속 시민 행동, 그리고 소제동에서 펼쳐진 다양성과 연대의 축제까지, 광장은 대전 시민들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진화를 고스란히 담아왔다.



[1] 1987년 대전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진 제공)

## 1987년 6월항쟁과 대전역 광장, 민주화의 불길

1987년 6월항쟁은 대전에서도 뜨겁게 타올랐다.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대전대 등 여러 대학에서 시작된 시위는 곧 시민들의 참여로 도심 전체로 번져갔다. 학생들의 구호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음료수를 건네며 함께 걸었다. 그날의 중앙로와 대전역 일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2] 1987년 대전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진 제공)



[3] 1987년 대전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진 제공)

특히 충남대 학생들이 유성 캠퍼스에서 대전역 광장까지 행진한 사건은, 학내에 머물던 군사독재타도 투쟁이 거리로 확장된 상징적 순간으로 기억된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대전역은 시민의 삶과 정치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기차 승객과 상인, 직장인과 학생이 뒤섞여 오갔고, 밤이면 신문을 팔고 술잔을 나누며 노래하고 토론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선거철이면 대규모 유세가 열렸고,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주요 집회도 이곳에서 이어졌다. 대전역 광장은 ‘누구나 우연히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자, 시민의 일상과 정치가 자연스럽게 맞닿는 공간이었다.



[4] 1987년 6월민주항쟁 기간 충남대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진 제공)



[5] 1987년 대전 (대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진 제공)

## 2000년대 촛불과 은하수네거리, 새로운 광장의 탄생

지방자치가 제도화되고 민주주의가 절차적 틀을 갖추면서 집회의 양상도 변했다. 2000년대 들어 촛불집회가 시민 참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 미선·효순 사건,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대전역 광장은 여전히 중요한 거점이었지만, 동서관통 도로 건설, 환승 동선 재편, 주차 공간 확대 등으로 광장 기능은 점차 축소되었다. 결국 대전역은 더 이상 상시적 시민광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 그 공백을 채운 곳이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였다.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인도에서 시작된 집회는 참여자가 늘어나면 차도의 일부를 막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6] 2017.02.18. 55차 박근혜 퇴진 대전시민 촛불행동, 13차 시국대회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국면에서 은하수네거리는 대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새로운 상징 공간이 되었다. 촛불을 든 가족, 청소년, 직장인들이 공연과 발언에 함께 하며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표현했다. 때로는 천막 철야농성이 이어지거나 집회가 가두행진으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다만 인도와 차도를 임시로 활용하는 특성상, 안정적 공간의 한계로 장기 농성이나 상시 집회를 위한 구조물 설치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은하수네거리는 안정적인 상설 광장은 아니었지만, '시민이 모이면 어디든 광장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무대였다. 이 공간은 최근까지도 대전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으로 기능했다.



[7] 2016.12.10. 36차 박근혜 퇴진 대전시민 촛불행동, 4차 시국대회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8] 2016.12.17 38차 박근혜 퇴진 대전시민 촛불행동, 5차 시국대회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역시 은하수네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면은 세월호나 박근혜 퇴진 촛불처럼 동네별 작은 촛불로 분산되기보다는, 은하수네거리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급박한 정치 상황에서 분산보다는 중앙 집중을 통해 세를 보여주는 전략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은하수네거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에 이어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도 여전히 대전 시민 민주주의의 현재를 담아내는 상징 공간이었다.



[9] 2024.12.14. 16차 대전시민대회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10] 2024.12.10. 12차 대전시민대회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11] 2024.12.13. 15차 대전시민대회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 으능정이거리, 생활 속 시민 광장의 지속성

대전 도심의 으능정이거리(은행동 스카이로드 일대)는 지금도 꾸준히 시민 집회와 행동이 이어지는 ‘생활형 광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 여성 인권과 평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이태원참사 추모 등 다양한 시민 행동이 이곳에서 펼쳐져 왔다. 상가와 보행 인파로 다소 소란스럽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만,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와 참여의 계기를 제공한다. 소풍을 하거나 길을 지나던 시민이 무심히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장면은, 이 거리가 ‘일상 속 민주주의의 현장’임을 보여준다. 으능정이거리는 대전 시민들이 꾸준히 발걸음을 이어가는 지속적 시민 광장이자, 기억과 행동이 공존하는 열린 거리로 기능하고 있다.



[12-13] 2025.09.27. 927 대전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927 대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사진 제공)



[14] 2023.04.16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다짐 문화제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사진 제공)

## 소제동, 새로운 시민 광장의 가능성

최근에는 광장의 의미가 또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열린 대전 퀴어문화축제가 소제동 카페거리에서 개최되면서, 그곳은 새로운 연대의 장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행정기관과의 협의 속에서 정해진 장소였지만, 접근성이 좋고 문화적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갔다. 소제동은 전통적 의미의 상시적 ‘일상의 광장’은 아니지만, 생활 문화 공간이 특정 순간에 집회와 연대의 장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시민 광장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광장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된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필요와 참여’에 따라 어디서든 탄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15] 2025.06.07.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진 제공)



[16] 2025.06.07.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진 제공)

## 집회의 양식과 시민 참여의 변화

공간의 변화는 집회 방식과 시민 참여 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전역 시대에는 유동 인구가 많아 누구나 구경하다가 참여할 수 있었고, 대규모 행진과 구호가 중심이 되었다. 당시에는 SNS가 없었지만, 광장 자체의 개방성이 시민을 불러모았다. 은하수네거리 시대에는 사전 SNS 홍보를 통해 준비된 참가자들이 모였고, 촛불·공연·문화제가 결합된 평화적 집회가 주를 이루었다. 가족과 청소년 등 참여층은 다양했지만, 공간 제약 탓에 안정적 상시 광장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웠다. 응능정이거리와 소제동은 일상 공간이 특정 순간에 광장으로 전환된 사례로, 시민 참여가 정치적 요구를 넘어 다양성과 존중, 연대의 가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7] 15.04.22 세월호 1주기 청소년YMCA 추모대회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유성 청소년어울림광장)

세월호 촛불은 정치적 쟁점투쟁이라기보다 아이들의 희생에 대한 애도와 공분에서 출발했기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 일반 시민 등 폭넓은 참여가 가능했다. 생활공간에서 작은 촛불이 켜졌고, 동 단위 모임과 학부모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났다. 이러한 분산적 집회는 이후 박근혜 퇴진 촛불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반면 윤석열 퇴진

촛불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급박한 정치 국면에서 촉발된 만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분산보다는 집중이 전략적으로 유리했다. 따라서 은하수네거리 같은 중심 공간에 시민들이 집결하여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세월호 국면이 일상적 공감과 분산적 확산을 특징으로 했다면, 윤석열 퇴진 국면은 정치적 긴급성에 따른 집중 동원으로 성격이 달랐다.



[18] 19.04.13 세월호 참사 5주기 대전지역 합동참배 및 기억과 다짐 문화제 (으능정이거리)



[19] 24.04.13 세월호참사 10주기 대전 기억다짐 문화제 (유림공원 내 중앙공원)



[20] 1987년 대전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진 제공)

### 광장은 끊임없이 재정의된다

대전의 광장은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의 장에서, 촛불혁명의 평화적 무대로, 다시 일상과 문화적 연대의 공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전역이라는 상징적 시민 광장은 사라졌고, 은하수네거리, 으능정이거리, 소제동 같은 생활형 공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은 민주주의가 제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재정의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다시 만나고 연대하며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민 광장이다. 광장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무대이자 거울이다. 대전 시민들은 그 광장을 스스로 열어가며,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

# 광장에서 불안을 쫓개고 연대를 쌓다: 평범한 시민이 대전에서 다시 배운 민주주의

윤석열 퇴진 대전 광장에 나온  
시민 '엽록체'와 '해바라기' 인터뷰

2024년 겨울, 대전의 광장은 다시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빼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두려움과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누군가가 아닌, '엽록체'와 '해바라기' 처럼 별명으로 불리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의 혼란 속에서도 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묻고, 스스로 광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치의 거대한 언어가 아닌,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 인터뷰는 두 시민이 거리에서 마주한 불안과 용기,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과정을 기록한 작은 증언입니다.



진행 이대희  
편집 이대희, 정혜용

## 1. 자기소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Q.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엽록체', '해바라기' 라는 활동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엽록체** 한때 말벌 동지였고, 지금은 노동조합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엽록체'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붙였어요. 고등학교 때 광합성 회로 외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엽록체가 원래 세균이었는데 식물과 공생하다가 일부가 된 존재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지금은 단순한 닉네임을 넘어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됐어요. 본명보다 훨씬 자유롭게 느껴져요.

**해바라기** 저는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2학년이에요. 어느 날 머리에 해바라기를 꽂고 다녔더니 친구들이 '해바라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웃음). 대전엔 학교 때문에 왔고, 지금은 선화동 충남학사 기숙사에서 지내요.

## 2. 계엄의 날: 혼란과 불안의 시작

**Q. 2024년 12월 3일 새벽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디에 계셨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엽록체** 게임을 하다가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소식을 봤어요. 처음엔 “윤석열이 또 헛짓거리하네” 하고 넘겼는데, 새벽 5시쯤 해제 의결이 나오고 나서야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죠. 너무 불안해서 차를 몰고 다니며 힘들어하던 친구들에게 안정제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해바라기** 저는 자느라 몰랐어요. 아침에 뉴스 보고 “진짜 계엄이었구나...” 싶었어요. 윤석열이 막 나가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가족톡방에선 “드디어 일을 벌였네” 정도였고,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 3. 첫 집회: 거리로 향한 마음

**Q. 처음 집회에 나가신 건 언제였나요? 그 집회에 나간 이유는요?**

**엽록체** 계엄 다음 날 저녁 바로 대전 집회에 나갔어요. 답답해서 어디든 가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며칠 뒤엔 여의도 국회 앞에도 갔고요. 탄핵 표결이 있던 날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바라기** 종강하고 고향 부여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랑 나갔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노래 부르고 행진하면서 이상하게 들떴어요(웃음).

#### 4. 함께와 혼자: 광장에서의 방식

##### Q. 주로 혼자였나요, 아니면 동행이 있었나요?

**엽록체** 대부분 혼자였어요. 가끔 번개로 밥 먹는 정도였죠. 우연히 만나고 헤어지는 게 편했어요. 동생이랑 갔던 날도 있었는데 이날에도 각자 행동했구요. 철저히 개인 플레이였어요(웃음).

**해바라기** 저도 거의 혼자였어요. 대전에선 얼굴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사하게 되는 게 좋았어요. 부여에서는 열댓 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꾸준히 모였고, 방학 내내 안 나가면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개강하고도 주말마다 계속 나갔어요.

#### 5. 긴장과 불안: 거리에서 버텨내기

##### Q.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던 시기,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엽록체** 머리는 멍한데 심장은 계속 뛰는 느낌이었어요. 현재 판결 일정이 미뤄질 때마다 불안이 훅 치솟았죠. 그래서 방에 혼자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카페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 같은 키워드를 계속 검색했어요. 집회가 있는 날엔 자전거를 타고 나가 발언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면서 몸을 움직였어요. 그게 불안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됐어요. 집회에 못 나가는 날에도 사람 많은 카페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만약 탄핵이 끝내 불발되면 “자퇴해야 하나”, “석사까지만 하고 전업 활동가를 해야 하나” 같은 고민도 해봤어요(웃음)

**해바라기** “왜 아직도 탄핵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잡으려고 했어요. 수업 듣고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집회에 가고, 돌아오면 밤 9시, 이 패턴을 거의 매일 반복했어요. 현장에서 서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누군가의 발언을 듣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하면 불안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집회가 없는 날에도 가능하면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채워야 잠이 잘 왔어요.

#### 6. 기억에 남는 현장

##### Q. 여러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셨는데요.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장면이 있었나요?

**엽록체** 서울 집회에서 본 “우리나라 정상 영입합니다” 피켓이 유난히 기억나요. 혼란 속에서도 유머로 버티는 감각이 살아 있다는 게 좋았어요. 남태령 집회는 풍경 자체가 강렬했어요. 언덕에 사람들이 쪽 앉아 있고, 앞에는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어서 마치 야외 공연장 같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콘서트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날이 무척 추운 밤이었는데, 어묵이랑 핫팩, 초코파이를 서로 건네며 버텼던 기억이 선명해요.

새벽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 옆자리 분이 “초코파이 드실래요?” 하며 챙겨준 한마디가 큰 위로였어요. 대전에선 전술인형 노동조합 깃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집회가 광장의 ‘축제’ 같은 에너지였다면, 대전 집회는 지역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진행하는 썩는 ‘마을 축제’ 같은 자리였어요. 또 “탄핵을 넘어 차별금지법까지 가자”처럼 탄핵 이후의 세상에 대한 발언이 많이 나오고, 후반부엔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며 발언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이번 싸움이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와 삶의 조건까지 질문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해바라기** 부여 집회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던 순간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처음엔 긴장했는데,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노래 잘하네”라고 웃어 주셔서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서울에선 의료부스 자원봉사를 했는데, 응급키트를 정리하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을 서명을 받는 일을 했어요. 정신없었지만 “내가 배우는 걸 현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감각이 들었어요. 무대 위 거창한 장면보다, 그 사이사이 손과 손이 바쁘게 오가던 장면들이 오래 남았어요.

#### 7. 가족과 일상: 두 세계 사이에서

##### Q. 가족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본인의 일상과 광장 활동 사이에서 차이를 느끼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엽록체** 가족과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각별하진 않아서요(웃음). 연구실도 대체로 조용했어요. 평소 정치 얘기를 나누던 선배 한 분이 “나 시위 갔다 왔다” 하신 정도였고요. ‘본명으로 사는 나’는 평소처럼 일상이었는데, ‘엽록체로 사는 나’는 광장에서 있었어요. 그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해바라기** 가족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불안해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했어요. 기숙사의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 8. 탄핵의 순간

##### Q. 탄핵 결정이 발표되던 순간, 어디에 있었나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엽록체** 탄핵 당일, 은하수네거리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사람들은 울고 환호했지만 저는 ‘끝났구나’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오히려 불안했어요. “이제 대선 시작이구나. 또 그 당이 이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근혜 탄핵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바꿔줄 줄 알았지만 백래시도 심해지고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해바라기** 저는 기숙사에서 봤어요. “탄핵됐다!”를 계속 중얼거렸고, “오늘은 기분 좋게 잘 수 있겠다” 싶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 9.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다

### Q. 이번 경험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엽록체** 민주주의는 1인 1표라는 원칙을 다시 몸으로 확인하게 해줬어요. 동시에 민주적 의사결정은 복잡하고, 귀찮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고 빠른 해결처럼 보이는 권위주의에 끌리기 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권위로 만든 합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반발이 폭발하거든요. 저는 이걸 '기술 부채'에 비유해요. 눈앞의 문제를 땀질하듯 처리하면 잠깐은 돌아가지만, 언젠가 더 큰 비용을 치르며 전면 수정해야 하잖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설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됐어요. '이겨 먹는 말'이 아니라 공감·이해·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설득이요. 현장에서 발언을 듣고 서로의 말을 확인하는 과정, 구호를 맞추고 행진하는 과정 자체가 그 연습이었어요. 번거롭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길이 지속 가능해요. 단기효율성만 보면 권위주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다시 터지는 문제를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느낌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배웠어요.

**해바라기** 예전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민이 직접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됐어요.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듣고, 구호를 외치고, 때로는 의료부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아는 걸 현장에서 쓰는 경험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공부하고 행동하면서 유지된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야 굴러가는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 10. 대전이라는 도시

### Q. 이번 일을 겪으며 대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나요?

**엽록체** 처음 대전에 왔을 땐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방에만 있고, 도시와 접촉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잠깐 머무는 곳'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탄핵 광장을 겪으면서 대전을 여기저기 오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애착과 자긍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성심당의 도시다" 같은 농담을 할 만큼요. 친구들한테 서울에서만 모이지 말고 "대전으로도 모이자"는 이야기도 자주 해요(웃음). 바람도 분명해졌어요. 이장우 시장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천을 그만 건드렸으면 해요. 그리고 도시가 친환경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높으니,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면 좋겠어요. 거창한 구호보다 도시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해바라기** 예전엔 '공부하러 와서 머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공부하고, 밥 먹고, 사람을 만나고, 집회에도 나가는 생활의 무대가 됐어요. 도시가 가까워졌고, '여기가 내가 사는 곳 이구나' 하는 감각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시민이 배우고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광장에서 시작된 경험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작은 모임들이 활발했으면 해요.

## 11. 연대와 소속감

### Q. 졸업 이후, 열심히 참여하게 된 활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엽록체** 집회장소에서 대학원생노조 지부장님 명함을 받은 게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엔 '후원' 느낌이었는데, 맡는 역할이 커지며 책임도 커졌어요. 혼자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얽은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같은 대학원생이라는 동질감 덕분에 노조가 다른 시민사회단체보다 더 큰 친밀감을 주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광장에서 여러 단체를 보며 정치는 멀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에서는 의료부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냈어요, 지금은 청년모임에서 활동도 하고 있어요. 모교에서 사이버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교육청·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 사안에 연대하던 정당에 가입했어요. 윤퇴진 광장 이후에 내 주변과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하는 단체도 늘어난 것 같아요.

## 12. 앞으로의 바람

### Q. 혹시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후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도 함께 말해주세요.**

**엽록체** 활동가라는 말이 아직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려도 괜찮아요. 학교 안에서는 지속 가능한 노동조합 체계를 남기고 싶어요. 임기 안에 토대를 최대한 단단히 만들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요.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소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온라인에 갇혀 생긴 소외감을 털어내려면, 현실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대전이라는 땅바닥에 붙여놓는 일"을 시민단체와 함께하고 싶어요.

**해바라기** 현장에서 배운 걸 계속 일상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필요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민원을 넣고, 손이 필요하면 자원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민주주의가 거대 담론이나 어려운 정책이 아니라, 제가 발 딛는 곳에서 매일 이어가는 행동이라고 믿어요.

## 13. 광장 이후,

### Q.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는 무엇인가요?

**엽록체** 카이스트 안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싶어요.

**해바라기** 이런 인터뷰 자리가 감사해요.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 공동체의 기억, 시민의 연대 그리고... : 현충원에 묻힌 이름, 오늘 우리가 마주하다

김선재 현충원 해설가  
신윤실 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장  
끼리, 무무, 선우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인터뷰

2018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하고 맞이한 2019년 1월 2일, 저는 단체의 시무식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회운동단체가 시무식·종무식의 장소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듯,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어디서 어떻게 새해를 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해 시무식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의 활동가들이 해마다 ‘의미 있는 자리’를 찾으려 애써온 마음이 그 공간에 배어 있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을 이어오며 현충원을 마주한 순간들도 선명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의인(의사상자·순직 교사·소방관) 묘역을 찾았을 때, 그리고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이슈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너른 공간에 무수히 이어진 묘역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기억해 왔는지, 또 무엇을 잊어 왔는지 오래 서서 생각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우리는 시무식의 자리를 현충원으로 옮겼습니다. 공화국의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한 이들, 불의에 저항했던 열사들, 정의를 찾고자 했던 투사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몸을 던진 의인들을 차례로 마주 보며 새해의 다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대전의 공간 중 하나인 현충원에서 출발합니다. ‘묻힌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연결하는 현충원 해설가 김선재, 국가적 기억의 경계를 확장해 온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잊지 않음’의 약속을 이어온 세월호 기억 활동가 신윤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이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억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묻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전경

## 1. 왜 이곳에서, 왜 지금

### Q.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공동 저자이며, 현충원 평화해설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진보당 활동가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전하는 역할이 해설과 정치 모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망자들의 이야기를 찾고 전하듯 살아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며, 그 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자 합니다.

**신윤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쟁하는 민중운동 단체들이 모인,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힘”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윤실입니다. 지난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상황실장으로 인사드린 바 있고요, 대전의 세월호참사 집행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끼리, 무무, 선우** 2024년부터 대전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퀴어도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 시민의 언어로 바라본 현충원

**Q. 올해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현충일(6월 6일) 당일에 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는데요. 올해 현충원은 어떤 의미였나요?**

끼리, 무무, 선우 현충원은 ‘호국영령이 계신 곳’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경건한 장소로 인식됩니다. 그곳에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이 작용한 트랜스젠더 군인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기에 더 상징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은 국가가 ‘기억할 사람’을 선정하는 장소라고 보는데, 퀴어와 트랜스젠더도 이 나라 시민이자 군인의 일원으로 기억되고 추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충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교육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보세요?**

김선재 현충원에는 10만여 분이 안장되어 있고, 민족·이웃·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에 부합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간 인물들은 문제제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상자 묘역, 순직소방관 묘역, 세월호 순직 교사 묘역 앞에서 특히 숙연해집니다. 이분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기회주의자에게는 일침이 되고, 대다수 평범한 이웃들에게는 공동체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안장 이후 현충원에서 ‘기억식’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진행하며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신윤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세월호참사 희생자분은 단원고 선생님 10분, 소방관 5분(세월호참사 구조활동 중 순직), 세월호 선원 3분입니다. 기억식은 매년 4월 16일에 순직공무원묘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만 가능한 행사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고, 4월 외에도 현충원 기행해설이나 다크투어 등으로 다양한 분들이 방문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06.06. 故 변희수 하사 현충일 추모 기자회견



24.04.16.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순직교사·소방관·의사자 기억식

### 3. 우리가 기억하는 현충원

**Q. 윤실님, 세월호 기억활동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자의 대전현충원 안장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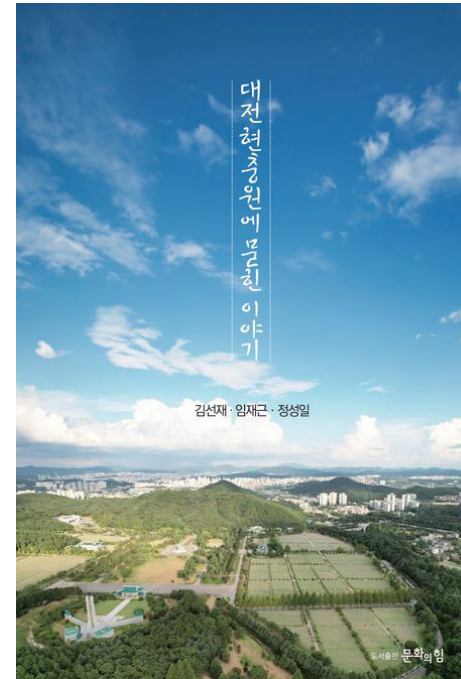
신윤실 희생된 단원고 선생님들 중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희생된 선생님들은 마지막까지 학생 한명이라도 탈출시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교사, 기간제 교사의 처우가 다르다는 것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요.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2018년에야 대전현충원으로 합동안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변희수 하사의 순직 인정과 대전현충원 안장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대전귀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위원장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요?**

끼리, 무무, 선우 과거에 인정되던 협소한 순직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확인을 받게 된 것이므로 우리 사회 및 국가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과거의 인식이 당연시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의미라고도 생각합니다.

**Q. 선재님은 현충원과 관련된 책을 공저로 출판하기도 하셨는데요. 해설을 하시다가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선재 말은 휘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록으로 남겨서 직접 해설현장에 오지 못하신 시민에게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기록은 시공간을 초월하니,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책의 어투도 해설체로 구성했습니다. 공저다 보니까 세명의 저자가 각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를수 있는데, 역사의 갈림길에서 개인의 선택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청년이 한명은 간도특설대, 한명은 광복군으로 활동한 분들이 대전현충원에 계시고, 12.12 쿠데타 당시에 진압군과 반란군 양편에 선 군인이 같은 묘역에 안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책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Q. 선재님이 공저로 출판한 책 제목이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인데요. 책 제목의 '묻힌'은 어떤 뜻인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김선재 '묻힌'은 안장의 의미이기도 하고 알려지지 못한 이야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전현충원에는 지난 100년 격동의 근현대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엇갈린 개개인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대를 살아간 개개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4. '영웅'이 아닌 '이웃'을 만나다

**Q. 선재님은 현충원에 묻힌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텐데요. 이야기들을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김선재 흔히 현충원은 영웅이 묻히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의사상자와 세월호 순직 교사 묘역에 서면 평범한 이웃을 만납니다. 스스로 위태로울 것을 알고서도 이웃과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는가, 그 선택은 타고난 영웅성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묘역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또 다른 이가 목숨을 바치는 일은 비극이므로, 사회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1.22. 4.16 세월호참사 기억다짐사업 보조금 전액삭감 대전시 규탄 기자회견

**Q. 책을 집필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재님이 세우신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김선재** 저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군 의문사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함께하셨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일은 특히 보람 있었습니다. 역사는 한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의 삶에 주목하는 일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균형을 맞추려 하기 보다는 현충원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대전현충원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안장되어 있어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이러한 현충원의 다층적 구성을 가능한 한 온전히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담지 못한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윤실님, 작년이죠. 2024년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대전시가 세월호 추모 사업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요. 그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힘과 연대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신윤실** 세월호참사 추모사업 보조금 삭감은 이장우 시장의 표적 삭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에게 유가족 면담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630만 원이라는 보조금은 사실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간 대전시가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함께한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0주기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고, 대전시의 이런 행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자 이에 분노한 시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무사히 10주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대의 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Q. 조직위원장님, 변 하사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군인'으로 기억하는 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끼리, 무무, 선우** 정체성은 여러 정체성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순직 인정과 현충원 안장은 정체성 하나가 다른 정체성의 발목을 잡지 않는 안정적인 사례로 남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특별한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환기했고, 군대에서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성소수자는 국가에 기여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존경과 연대의 의미를 확장했다고 봅니다.

## 5. 현재 진행중인 이야기

**Q. 조직위원장님 변희수 하사의 전역 취소 승소와 순직 인정이 군·사회 인식에 준 변화는 무엇이며, 이를 제도로 고착화하려면 국방부가 무엇을 마련해야 할까요?**

**끼리, 무무, 선우** 폐쇄적 조직에서도 성소수자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던 흐름을 뒤집었고, 국가는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제도적 관점에서 다뤄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직업권 보호 논의가 열렸지만 트랜스젠더 복무 기준은 비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전신 근로역·강제 전역 규정을 고치고, 상위법에 인권 보호를 명시하며 군 인사법·병역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개별 평가 가이드라인·전문 지원체계를 갖추고, 군형법 모호조항을 재정의하며 차별 신고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문화·교육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Q. 윤실님 세월호 이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유족들을 만나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신윤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벌어진 재난참사라는 점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뚜렷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세월호참사를 보며 자란 청년들이 이태원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 세대라는 점은 두 참사가 이어지는 지점 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세월호참사보다 이태원참사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가 굉장히 심각했고, 세월호참사를 학습한 윤석열 정권이 전략적으로 유가족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초동대응을 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움직였던 점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을 만나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23.10.23.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대전 추모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유족분들 앞에서 내 감정이 먼저 앞서지는 않는지 늘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지금은 함께 투쟁하는 동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선재님은 책을 집필하실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매년 현충원 안장의 자격을 놓고 여러 논쟁이 있기도 하고요. 논란이 있는 인물을 다룰 때 어떤 기준을 세우셨는지요.**

**김선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각 사람이 가진 공과를 모두 따져야 한다는 공과론의 유혹이 있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준을 분명히 세우려 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 타당한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국립묘지는 후세에 전할 가치를 간직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가 후세에 보내는 메시지가기도 하니, 그에 부합하는지가 기록의 기준이었습니다.

## 6. 기억의 장면들

**Q. 조지위원장님은 올해 현충일 당일 대전시민들과 변희수 하사의 묘역을 방문해서 추모 행동을 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끼리, 무무, 선우** 시민들뿐 아니라 변희수 하사의 지인으로 보이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울며 인사를 건네는 분도 계셨고, 미소로 말을 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여성분이 혼자 꽃을 들고 와 묘역을 손으로 문지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Q. 선재님이 '몰린 이야기'를 발굴한 과정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김선재** 발품팔았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공저자 한 분은 사진 한 컷을 위해 국외를 오가며 촬영했고, 12.12 관련 인물의 행적을 오래된 기록으로 추적했습니다. 유성구 진잠동 어딘가에 있다는 비석을 찾고자 동네 어르신들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재개발 과정에서 비석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책이지만 발로 뛰며 한 줄 한 줄 완성했습니다.

**Q. 세월호 문제와 재난 피해자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신윤실** 변화보다는 확고해진 생각이 있는데요, '연대와 단결의 크기만큼 우리 사회가 바뀌어간다'는 거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힘으로 뭉쳐야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한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25.06.06. 故 변희수 하사 추모식

## 7. 앞으로 우리는,

**Q. 선재님이 이 글을 읽고 현충원에 방문할 마음을 먹은 독자 분에게 코스를 추천해주신다면요?**

**김선재** 음... 일단 그러면은 현충원 정문을 들어가서 직진을 하시면요. 우측에 연못과 정자가 있거든요. 연못과 정자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고 또 좌측으로 쪽 올라가다 보면 메타세콰이어 이제 울창한 숲 길이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허기지시면은 구암사에서 하는 국수 자원봉사가 있거든요. 국수도 한 그릇 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처음 가 보시면은 대단히 아늑한 공간이긴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대단히 풍광이 좋고 아늑합니다. 처음 가 보실 때 아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들 갖고 가실텐데 일단은 그 고민을 좀 털어 놓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묘역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처음 가신다는 가정이니까 뭐 어디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전현충원 현충문

**Q. 지역 활동가들이 방문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김선재** 정연관 상병의 묘를 방문해볼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분이 87년 12월달에 돌아가시는데 당시 이제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선거하는 시점에 이분이 군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입대하기 전에 5.18 비디오를 보고 입대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변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군대 내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됐거든요. 당시 근데 부재자 투표에 선거 부정이 만연했어요. 그 사례는 다 책에 있지만, 그 과정에 자기가 휴가 나와서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부대 내에서도 자기 부대 동료들을 설득해 가지고 결국 그 부대에서 야당 표가 3표가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저분의 이런 운명까지 걸 정도의 신념과 사상은 또 뭐였을까 결심하셨던 배경은 뭐였을까 이런 게 좀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런 희생을 희생 이후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도 같이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윤실님 세월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대전 시민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신운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를 향해 책임을 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국가도 지자체도 또다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은 힘이 세지'라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이뤄내는 것도 기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의 눈과 감시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거라고 생각합니다.

**Q. 조직위원장님 앞으로 조직위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시지요.**

**끼리, 무무, 선우** 내년에 3회를 맞는 대전퀴어문화축제를 무사히 열고 싶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근 활동가가 필요하지만 재정은 빠듯합니다. 축제를 꾸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8. 참여에게



25.04.12. 세월호참사 11주기 대전 기억다짐 문화제

### Q. 세 분 모두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신운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30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역 의정감시활동과 민주적 정책제안으로 지방자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 길을 늘 응원합니다!

**김선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지난 세대 동안 대전참여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 이후의 격변을 지나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세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전참여가 6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출발선에서, 이번 세대를 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새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 대표 시민사회단체로서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응원합니다. 특히 지역 권력 감시와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굳건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회원으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끼리, 무무, 선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년 동안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시민운동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퀴어문화축제와 함께하며 지역의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활동가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연대가 차별 없는 대전, 모두가 존중받는 대전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과 연대를 전합니다.

###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300여 명의 인물들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조명하는 책이다. 독립운동가, 군사반란 관련자,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 사회공헌자의 삶과 죽음이 네 개 장에 걸쳐 입체적으로 소개된다. 저자들은 현장 해설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의 굴곡진 인생과 대한민국 국립묘지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한다. 가려졌던 기억을 복원하고,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 변희수 하사와 대전퀴어문화축제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이후 2020년 강제 전역 당했고, 2021년 사망한 뒤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4년 3월 순직이 인정되어 같은 해 6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안장식은 유가족·인권단체 등 80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해 조용히 진행되었으나, 일부 보수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은 성소수자 군인의 충성과 권리, 군내 차별 철폐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25년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6월 6일 현충원을 방문해 변희수 하사 추모 행동을 진행하고, 6월7일 축제 현장에 추모 부스를 마련했다.

###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과 기억 운동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묘역에는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교사 10명, 구조헬기 추락으로 숨진 소방관 5명, 승객 탈출을 도운 의사자 3명 등 총 18명의 시민이 안장되어 있다. 단원고 교사들은 마지막까지 학생을 지키다 희생되었고, 소방관들은 구조 현장에서 헌신했다. 의사자 승무원들은 승객 구호에 앞장서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교훈, 진실 규명의 요구 다짐을 상기 시킨다. 매년 4월 16일 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 기억식이 열리며,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추모와 안전 사회 건설을 다짐한다.

진행 김재섭  
편집 김재섭, 정혜용

#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세던 손 : 카카오뱅크 이지영

이지영  
사단법인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처장 인터뷰

**Q. 카카오뱅크 이지영으로 인터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솔직히 웃겼어요. ‘카카오뱅크 이지영’이라는 건 없던 거잖아요. 서울에서 ‘카카오뱅크 심규협’이 화제가 되면서 지역에서도 따라하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인터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아래 그림처럼 온라인에서 후원 계좌가 퍼졌던 걸 알고 계셨나요?**



윤석열 탄핵 집회 운영을 위한 전국 모금 담당자를 누군가 SNS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후원을 독려하는 모습 (X 캡처)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래도 서울 쪽으로 관심이 더 쏠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집회 때 비용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모금에 많이 참여해주셨죠. 다만 지역 집회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서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게 아쉽네요.

**Q.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

집회 비용의 대부분은 LED 차량, 앰프, 손피켓 제작 같은 데 들어갔어요. LED 차량으로 한 번 집회를 하면 700만~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게 큰 비중을 차지했죠.

**Q.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 때부터 후원계좌를 맡으셨다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때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집회에 참여했고, 상황실 회의를 함께했어요. 제가 원래

회계나 정리 같은 걸 꼼꼼히 하는 편이라 맡게 됐어요. 당시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이기도 해서, 조직화와 모금 활동까지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계를 맡게 됐죠.

**Q. 박근혜 퇴진과 윤석열 퇴진, 두 번의 탄핵 집회가 있었는데요. 대전 시민들의 정서나 참여 방식은 어떻게 달랐나요?**

박근혜 퇴진 때는 극우 쪽 반응이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았어요. 탄핵에 대해 속으로 뭐라 생각했을진 몰라도 표현은 안 했죠.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조직하고 진행해서 놀랐어요. 또 전에는 80~90년대처럼 집회가 엄숙하고 결의에 찬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구호도, 노래도, 깃발도 훨씬 자유롭게 봐요. 확실히 과거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엔 ‘무겁고 결연한’ 집회였다면, 이번엔 응원봉 흔들고 노래 부르며 ‘함께 노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옛날 활동가들은 조금 낯설었을지도 몰라요. (웃음)

**Q. 탄핵 집회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4월 4일이 제일 기억에 남죠. 특히 파면 방송이 나왔을 때 다 같이 울었던 순간이요.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활동가들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선명해요.

**Q. 후원자들의 응원 메시지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대부분은 “윤석열 탄핵” 같은 짧은 문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만 원을 톨돌 말아서 메모지와 리본을 묶어 모금함에 넣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죠. 후원하려고 미리 접어온 그 정성에 울컥했어요.

**Q. 앞으로 또 대규모 집회가 있다면, 다시 카카오뱅크 이지영을 맡을 생각 있으신가요?**

이제는 못해요(웃음). 나이도 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박근혜 퇴진 집회 때는 매일같이 현장을 다녔는데도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Q. 매일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요?**

매일 아침 전날 모금한 돈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꼬깃한 지폐랑 동전까지요. 어느 날 창구 직원이 “혹시 사업하시나요? 아니면 장사하세요?” 물더라고요. 매일 현금을 가져오니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집회에서 모금한 돈이에요”라고 했죠. “어떤 집회요?” 해서 “윤석열 퇴진 집회요”라고 말했더니, 그다음부터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부터 내밀더라고요(웃음). 파면 전까지 매일 갔으니 그럴 만했죠.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시 집회에 함께했던 대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파면이 되고 마지막 집회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에 후원자 이름을 전부 넣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시민 한 분이 계속 화면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면에서 ‘정말 대단하다, 이게 시민의 힘이구나’ 생각했어요. 영상을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진행 설재균  
편집 설재균, 정혜용

# 대전시의 '대전여성영화제' 검열: 차별과 혐오행정에 맞선 대전 여성운동의 기록

지금도 맞서 싸우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의 현장 | 여성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24.09.02. 대전여성영화제 상영작  
상영중지 요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매년 지역 여성단체와 협력해 기념행사를 열어왔고,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그 일환으로 9년째 '대전여성문화제'를 개최하여, 여성주의 강좌와 '대전여성영화제'를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왔다.

그러나 2024년 양성평등주간 대전여성문화제를 준비하던 8월 30일, 영화제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대전시는 상영작 <딸에 대하여>가 "동성애를 다뤄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상영 중지를 요구했다. 이는 일부 혐오세력의 민원을 빌미로 한 명백한 검열 시도이자, 성평등 정책의 퇴행이었다.

이에 우리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8월 31일 시청 교육정책전략국장과 담당과장 면담에서 작품의 취지와 여성주의 영화임을 설명하며

양성평등주간의 취지에 부합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민원이 있다", "논란이 크다"며 상영중지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상영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대전시의 지정보조금을 반납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긴급모금을 통해 대전여성영화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민들의 긴급 모금이 시작되었고, 주말 이틀 동안 전국 각지에서 "대전여성영화제를 지지한다"는 응원문이 이어졌다. 시민의 연대는 지역 여성운동이 쌓아온 신뢰의 힘이자, 성평등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증거였다. 9월 2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의 검열과 차별행정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고 보조금 보이콧을 공식선언했다. 그 결과 영화제는 시민의 연대로 예정대로 열렸고, '시민의 연대로 만든 대전여성영화제'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 행정이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받아들여 재생산한 정치적 행위였다. 특정 집단의 소수 민원을 이유로 공적 절차를 유예하거나 소수자의 표현을 배제하려 한 것은 공공성이 특정 편향에 의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였다. 행정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다양성을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을 통해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도구에 불과했다. 우리는 지역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그 부당함을 시민의 연대로 맞섰다. 다만, 단체 내부의 한계로 대전시의 차별행정에 대해 아직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지 못해 제도적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과제로 남아있다.

대전여성영화제에 대한 차별과 혐오행정에 맞선 이번 사안을 통해 성평등이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연대하며, 시민의 힘으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싸우는 이유이며, 끝나지 않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2024.09.06. 대전여성영화제 중  
<딸에 대하여> GV 현장



25.09.05. 2025 대전여성영화제 <CUT, and SCENE CHANGE!>

# 대전 인권 투쟁, 현재 진행형인 시민의 연대와 저항

지금도 맞서 싸우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의 현장 | 인권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 숲 사무국장



23.09.26.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반하장식 인권센터 폐쇄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23.05.15. 극우/반인권 교육에 대하여 보이콧하는 인권센터 강사단

대전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시작으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인권 운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초 민간위탁기관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와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에 위탁되면서, 인권과 성평등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대전시 행정은 위탁 기관이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에 시민과 인권·시민단체들은 ‘대전인권비상 행동’을 결성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했다. 대전시는 심사 과정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시민단체들은 행정 심판 청구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으로 맞섰다. 한편, 인권센터 내부에서도 5년간 지켜온 인권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강사단을 중심으로 종교 편향 교육 반대, 선별적 강사 파견 강의 전면

보이콧, 인권팀 면담 요청 등 강경 대응이 이어졌다. 결국 2023년 12월 센터 폐쇄 시점까지 모든 구성원이 끝까지 인권 수호를 포기하지 않았다. 인권센터는 대전 인권 운동의 상징적 역사로 남았다.

그러나 현실은 현 대전시장의 3년 임기 동안 인권보장 체제는 크게 무너뜨려져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한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하 넥스트클럽)은 대전·세종 지역 공공기관 10여 곳을 위탁 운영하며 특정 종교 이념에 기반한 편향적 성교육을 강요해왔다. 특히나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서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여전히 대전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혐오 세력에 단호히 맞서고 있다. 불공정한 행정과 부당한 위탁 심사를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증거 수집에 힘쓰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편향 교육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행정심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전시와 관련 기관을 압박하며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굳건히 지키려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 투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혐오와 차별 세력에 맞선 인권과 평등 수호의 결연한 의지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사회 변화를 이끌고,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제도나 구조가 아니라, 차별받는 이웃과 함께 손잡고 권리를 지키는 일상의 싸움이다. 대전 인권 현장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연대와 희망이

흐른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단단한 희망의 노래가 되며,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감시하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일보이다.

대전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의 단호한 투쟁이 이어져 대전은 인권과 평등의 도시로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가 전체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인권 가치를 지키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삶의 방식이다. 인권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임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 무지갯빛 민주주의를 위한 퀴어문화축제

지금도 맞서 싸우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의 현장 | 퀴어

대전퀴어문화축제는 2024년 7월 6일에 시작되었다. 그간 성소수자 관련 기자회견 및 행사는 단발적이고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성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행사는 없었다. 대전퀴어문화축제는 충청권에서 최초로 성소수자를 드러내는 행사가 되었다. 또한, 지역 퀴어문화축제로서 대전과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성소수자의 가시화 및 활동, 예술인 협업 및 지역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대전퀴어문화축제는 전국에서 첫 타자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2024년 12월, 내란 사태 이후 광장에서 터져나온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자 노력했다. 윤석열 탄핵으로 올해는 대전광역시나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적극적인 방해는 없었다.

작년에는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한 공간 신청에 있어서 차별적인 행정 집행을 경험했다. 대전의 5개구(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에 존재하는 모든 광장(공원) 사용신청서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불편, 사회적 찬반의 사유로 4개구에서 불허처분을 당했다. 유일하게 동구에서는 담당자가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허가되었지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의 혐오발언 이후 즉시 불허가 처분으로 변경되어 통보되었다. 동구청장 박희조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반대하는 발언도 했다. 이후 동구청은 행사 진행

끼리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등에 필요한 부스 설치를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언론에 내비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준표의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력 남용 방해 행위에 대한 1심 판결(700만원 배상)이 나왔고, 이후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전시와 동구에 엄중 경고를 했다. 그러자 동구청은 입장을 바꾸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성소수자인 대전 시민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대전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차별적인 만행이었다.



24.07.06.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 현장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 행진을 막는 혐오세력과 대처

대전퀴어문화축제는 이렇게 차별적인 행정과 함께 2회차를 경험하면서 여러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첫째,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모임이나 조직이 없는 상황인데, 모임이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장되었다. 둘째, 공동주최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동의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지역사회의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 먼저,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장소의 인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2회 축제 진행 과정에서 경찰이 협조적으로 태도가 변화되었다. 행정이나 정치권에서도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행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면서 성소수자 시민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확장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지속되면서 지역 성소수자 모임 및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대전에는 11개의 종합대학, 5개의 전문대학, 1개의 사관학교, 1개의 과학기술원, 2개의 대학원대학이 있다. 그 만큼 청년 인구(15~34세)도 서울 다음으로 많은 상황(약 34만 명)이다. 대학 내 성소수자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면서 지역퀴어문화축제의 적극적인 주체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노인의 권리가 더 확장되고 발화되기를 희망한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과 목소리가 가시화되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에서부터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싶다.



25.06.07.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 현장

# 대전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 전쟁으로 번영을 꿈꾸는 도시에서 평화를 배우는 사람들

이대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장

지금도 맞서 싸우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의 현장 | 평화

대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중심 도시, 전쟁으로 번영을 꿈꾸는 도시다. 무기 수출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자리하고 있으며, 유성구 일대에는 대규모 신청사가 건립 중이다. 인근 충남에는 확산탄을 생산하는 무기 공장이 있고, 한화그룹은 자주포·군함·미사일을 주력 산업으로 삼으며 대전을 핵심 거점으로 두고 있다. 대전의 상징인 한화이글스는 바로 그 한화 그룹이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수출한 무기의 이익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다.

이 도시의 산업 구조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기술과 이윤, 곧 폭력의 경제에 기대고 있다. 현 집권여당은 '방위산업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무기 수출 세계 4위의 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홍보한다. 이들에게 전쟁과 학살은 시장의 확대이고, 평화는 시장의 축소다. 기존 정치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자라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생명과 안전, 국가폭력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군비 확장과 무기 산업의 확대에 저항하는 비폭력 행동을 이어오며, “무기의 도시 안에서도 평화의 언어를 만들어가자”는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오랜 노력이 축적되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방위사업청 앞에서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고, 이후 1인 시위가 자발적으로 이어졌다. 그 행동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가진 지역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여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을 결성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모인 이들은 이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4.01.19.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집회



25.10.15.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집회 1인시위



25.08.18. KAIST의 CIPA 2025 이스라엘 테크니온 세션 취소 요구 기자회견

2025년 8월에는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 카이스트분회와 함께 “집단학살자 이스라엘과의 학술교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학문과 연구 역시 전쟁의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했다. 이 행동은 대학과 지역, 시민사회의 평화 실천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팔레스타인 대화모임'을 진행하며, 각자의 연대 경험을 나누고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당신은 하마스를 모른다> 북토크, 다큐멘터리 <언허드> 함께 보기 등도 진행했다. 모임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대전이라는 전쟁산업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했다.

대전에서 평화를 외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다수가 무기 산업을 현재의 먹거리이자 미래의 번영 도구로 여기는 도시에서, 전쟁 대신 평화를 이야기하는 일은 종종 헛소리로 취급된다. '평화는 돈이 안 된다'는 잔혹한 논리 앞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하다.

'전쟁'을 막기 위한 활동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대전에서의 작은 실천은

전쟁이 남긴 거대한 상처에 비하면 너무 작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어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전히 폭탄과 기아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한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모임은 그런 마음의 노력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중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학살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에 대전모임은 팔레스타인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날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활동은 단지 집단학살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적 구조와 싸우는 것이다. 전 세계 무기산업을 멈추고, 평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전이 폭탄과 전쟁으로 상징되는 도시가 아니라, 평화와 인류애로 기억되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바꾸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 세종보 천막농성, 강은 길을 잃지 않는다

지금도 맞서 싸우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의 현장 | 환경

2012년, 22조 6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4개의 강에서 5억 7000만 톤의 모래를 퍼내고, 16개의 보(댐)을 건설한 최대, 최악의 국책사업. 네 차례나 진행된 감사를 통해 건설사의 담합비리가 드러났고, 이명박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홍수나 가뭄의 예방효과가 전혀 없고, 되려 수질과 수생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면서 세종보를 비롯한 5개 보의 수문을 열고 보 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수문이 열려 흐름을 회복한 강의 귀환은 눈부셨다. 악취나는 퇴적토가 쌓여있던 자리에는 모래와 자갈이 쌓이고 여울이 생겨났다. 녹조는 사라졌고, 강을 떠났던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 강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물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모두 삭제했고,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단 15일만에 취소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모두 기능이 정지됐고, 단 한차례의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도 진행되지 않았다. 단 45일만에, 우리 나라의 물정책은 수십년 전으로 퇴행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한 장기간 개방 보인 세종보의 재가동을 발표했다.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졸속 불법적으로 정책을 뒤집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싸웠다. 연행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세건의 소송을 치렀지만 모든 민주적 수단은 차단되었고, 결국 역행하는 정부를 몸으로 막아 세웠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보철거시민행동')은 세종보 수문 재가동이 예고된 2024년 5월의 이틀전인 4월 29일, 세종보 상류 500m 지점,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고스란히 강물에 수장되는 위치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천막을 쳤다.

2025년 10월 15일, 우리는 농성 534일차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세종보 수문은 닫히지 않았고 금강물은 힘차게 흐르고 있다. 농성이 이어지는 동안 흰목물떼새는 두번의 산란과 부화를 성공시켰고, 지금은 올해 태어난 아기새들이 농성장 주변을 활공한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강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부분 제1공약으로 삼고, 국정과제로 최종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5년 동안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금강 영산강의 5개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쳤고, 그마저 윤석열 정부들어 졸속으로 취소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물정책 퇴행을 물내란으로 정확하게 단절해내고,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여 빠르게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한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말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의 반복이 아니다. 강의 회복은 더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기후 재앙의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물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강의 회복은 필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러운 많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맑은 물이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공론화', '재논의' 등을 언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모습에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재연된다. 3년 6개월에 걸쳐 천천히 느리게 전진하고 진보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단 45일만에 내란정부가 뒤집었다. 이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판단없이 민주주의 진보는 없다. 언제까지 정치적 섀베프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인가. 우리는 더이상 숫자로 날짜를 헤아리지 않는다. 여기서 만나는 흰목물떼새의 둥지, 수달의 발자국, 돌아온 미호종개와 흰수마자를 헤아린다. 이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잊지도 않고, 스스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 스스로 정의와 상식을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 운동에 대의를 부여한다. 세종보 천막 농성은 우리 강 회복의 교두보이며, 물정책의 최전선이다. 이곳에서 생명의 권리를 받드는 '민주주의'를 꿈꿔본다.



24.04.29. ~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천막농성 현장

## 재섭

단체에 입사했을 때, 처음 과제가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10년사, 20년사 텍스트를 읽는 것이었는데요. 잘 실감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집 과정에서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단체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요. 아쉬지만,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이 기대되는 법이니까요. 다음에는 그냥 인터뷰 대상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 혜용

올해 내내 '30주년'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는데도, 사실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책을 만들면서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활동이, 또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책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잘 담기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게 됐어요. 읽으면서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참여를 떠올려주신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 특별히 고마운 분들

무작정 요청했는데도 흔쾌히 글 써주시고, 인터뷰해주신 모든 분들, 사무처와 함께 옆에서 책 만들기에 힘써주신 이대희님, 특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디자이너 정은지님. 덕분에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재균

인터뷰 하면서 그동안 지나왔던 이야기들이 살아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의 활동들이 입체적으로 이해되면서, 지금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과 담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다 실을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담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언젠간 풀어보고 싶네요.

## 대희

지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매일 만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깃발을 흔들고 스티커를 나누던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불안에 휩싸여 있던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서 있을까.' 인터뷰를 정리하며 그들도 나와 같이 두려워했고, 광장에서 느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전히 각자의 현장에서 깃발을 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결국 광장에서 만나고 자신의 자리에서 싸우는 시민들의 역사임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 지방자치 30년,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

**발행** 2025년 11월 6일  
**편집**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 | 김재섭 설재균 정혜용  
**디자인** 정은지 (TTBW)

**펴낸곳**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펴낸이**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  
**창립일** 1995년 4월 28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1층  
**전화번호** 042) 331-0092  
**홈페이지** [www.cham.or.kr](http://www.cham.or.kr)  
**전자우편** [djcham@hanmail.net](mailto:djcham@hanmail.net)

**제작지원**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25

이 책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30주년과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30년,**

**시민이**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